

여름 충남

THE CHUNGNAM REVIEW

1

통권 45호 2009

권두언/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행정체제 개편과 충남의 발전과제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 추진방향

광역경제권역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방안

열린충남은

충남도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발간됩니다.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지기!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 연구 수행으로
충남의 미래를 여는 일류 Think Tank로 발돋움하는
‘충남발전연구원’이 함께합니다.

2009년 1월 1일 (통권45호)

발행인 김용웅

편집위원장 송두범

편집위원 · 원내: 강영주, 권영현, 고승희, 오용준, 신동호, 유학렬, 이인희, 오혜정
· 원외: 황창연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오석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기획 및 편집간사 정봉희

발행처 충남발전연구원

주 소 314-140 충남 공주시 금홍동 101

연락처 041-840-1123 팩스 042-840-1129

홈페이지 <http://www.cdi.re.kr>

디자인·인쇄 중부인쇄기획(042-253-7537)

여리인 충남
THE CHUNGNAM REVIEW

통권 45호 2009. 1

Contents



권두언

- 006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충남도지사/이완구

특집 / 행정체제 개편과 충남의 발전과제

- 008 바람직한 행정체제개편 추진방향 성태규 · 고승희
016 광역경제권역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방안 최진혁



충남논단

- 026 새정부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충남의 도시재생 방향 송두범·임준홍·윤정미
038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임준홍 · 김경태

해외탐방

- 058 역사·문화 유물을 관광자원화한 도시, 베네치아 윤정미



충남의 도시

- 064 서천, 새로운 도약과 변화에 도전하다 한상욱

충남축제탐방

- 072 '제8회 보령천북굴축제'를 가다 이용원



- 오피니언**
- 078 식품산업에서 충청남도의 미래를 본다 이숙경
 - 082 '허준' 처럼 관심을 모을 방법은? 정종수
 - 085 충남 전시예술의 발전 방안 박동교
 - 088 광역경제권의 성공조건과 과제 김용웅



문화의 중심, 명품충남의 건설
비전없는 국가경쟁력 강화 대책
지방중소도시, 미래형 전원도시로 거듭나야



- 충남소식**
- 096 도정소식
 - 110 연구원소식
 - 124 RHRD소식
 - 126 RIS소식
 - 130 수질관리센터
 - 132 도시재생센터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충청남도지사 | 이완구



2009년도 기축(己丑)년 새해의 처음을 ‘열린 충남’과 함께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우리 도의 현안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김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기조의 퇴조와 미국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세계 실물경제의 동반침체에 따른 국가 및 지방경제의 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한해였지만, 우리 도는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로 큰 어려움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서해안유류유출사고 극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도청이전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예산지원의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외자·기업유치 및 도민1인당 GRDP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더욱 빛나는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규제 개선 건의에 따른 특별법 제정,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농어촌 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전국 확대 등 국가 정책을 주도하는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고품격 문화 충남’과 ‘함께하는 복지사회’를 목표로 열심히 일한 결과,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유치, 백제역사재현단지 민간자본 투자 확정, 백제문화제와 계룡군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 전국체전 12년 연속 상위권 입상 등 문화 분야에서의 눈부신 성적뿐만 아니라,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 1위, 고령사회 맞춤형 서비스 5개년 계획 수립 등 맞춤형 복지실현 중장기 계획 마련·시행,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 등 복지·환경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명품충남의 완성을 목표로 가치가 살아있는 고품격 문화 창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지만, 특히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신속히 벗어나기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2009회계연도 개시 전 934억 원의 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기업의 숨통을 터주었고, 앞으로 도와 시·군에서 집행할 전체 예산인 8조 5천억 원 중 90%를 내년 상반기에 발주하고 이 자금 중 60%를 같은 기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의 경제

여건만을 탓하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삼아 외자유치에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기업과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만 경제의 엔진이 멈추지 않고 다시 살아나 청년실업 등 일자리문제가 해소될 것이며, 도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유지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중산층이 줄어들고 소외계층이 많아지는 등 사회양극화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도는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한 차원 높은 맞춤형 정책개발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는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인데, 고령층을 위해서 건강·소득·여가·주거 4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이 빈곤한 아동의 가난의 대물림 방지 및 학습 환경의 조성을 위한 아동 희망프로젝트 5개년 계획에 모두 2,0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환경개선, 직업재활, 고용 등 다차원적인 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에만 838억 원을 투자하는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더 큰 관심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도정을 뒤흔들 수 있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원칙적인 반대” 입장이 분명합니다. 시민사회를 포함한 도민과 도지사 모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 철회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지방발전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그것이 단순한 보상차원이 아닌 국가경쟁력을 위한 지방의 균형발전이 진정한 발전임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지방발전종합대책의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제안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앞바다가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을 때, 우리는 돌 하나, 바위 틈 사이 기름때까지 닦아내어 우리의 바다를 살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가 있는 한 우리에게 당면한 대·내외적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2009년 새해를 맞아 충남발전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우리 도정의 번영과 200만 도민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직한 행정체제개편 추진방향

성태규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고승희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머리말

실용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체제개편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은 이번에만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이전 정권에서도 제기된 문제로서, 2005년에는 국회에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까지 설치·운영되어 개편안까지 제시된 적도 있었다. 최근에도 한나라당(안), 민주당(안)이 산발적으로 제기되다가 2008년 11월 3일 권경석 의원이 국회에 입법발의안을 제기하여 향후 본격적인 개편논의가 전개될 양상이다.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및 구역의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 및 정치권에서 산발적인 문제제기 수준으로 논의되었을 뿐, 지속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못하였다. 그 이유는 행정구역제도의 문제가 다른 정치적 이슈에 밀려 중심 아젠다가 되지 못했고, 행정구역개편이 다양한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었다.

〈표 1〉 정치권 및 국회의 행정구역개편 논의

시 기	주 체	내 용
1996.05	신한국당 정책토론회	도 폐지,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폐지 등
1996.12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자치구 구청장의 임명제 등
1999. 가을	정기국회(국감, 예결위)	준자치단체와 광역시의 도통합 등
2000.07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1층제의 광역시 체제로 개편
2002.10	열린우리당 노무현 후보	행정구역개편 대선공약 제시
2005.12	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행정계층 1단계 감축 시·군·구 광역화

시 기	주 체	내 용
2008.09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현행 시·군·구를 70여개 통합광역시로 개편 道 폐지, 지방광역행정청 설치 읍·면·동을 자치단체로 승격
2008.11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道 폐지, 시·군·구 광역화 특별시·광역시는 선출직, 道는 임명직

학계 및 정부에서도 1988년 김안제 교수에 의해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안이 제시된 이후 많은 학자들과 정부 산하 위원회 등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논의되었지만,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행정구역개편의 이슈는 시민사회 등 국민적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관련 전문가집단 내에서의 논의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표 2〉 학계 및 정부위원회에서의 행정구역 개편논의

시 기	주 체	내 용
1988	김안제 교수	24도46시196군으로 구역개편 제안
1988	민주화추진위원회	“도는 지역감정 조장 등으로 인해 개편검토 필요” 주장
1988.07	행정개혁위원회	3계층을 2계층으로 축소
1999.11	정책기획위원회, 새천년준비위원회	광역시의 도 편입 등 주장
1999.6	마지막 남은 개혁@2001	준자치단체화, 도 폐지·광역시 승격

이에 본고에서는 국회에서 최근 발의된 일련의 행정체제개편안의 특징을 종합하고, 향후 행정체제·구역개편이 국민의 합의 속에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을 제기하고자 한다.

행정구역 개편(안) 종합

본 연구에서는 검토하고자 하는 개편(안)은 가장 최근인 2008년 11월 3일 권경석 의원이 발의한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안)」, 허태열 의원(안)(2008.9), 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2005.12) 등이다.

최근 제기된 일련의 3개 행정체제·구역개편(안)의 공통점으로는 첫째, 행정계층을 현행의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서 광역자치단체의 道를 폐지하여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의 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단 특별시·광역시에 대한 폐지는 유보하고 있다. 특별시·광역시는 별도로 국회특위(안)과 허태열 의원(안)에서는 추후 결정을 담고 있는데 비해, 권경석 의원(안)에서는 특별시·광역시의 존치를 담고 있다. 국회특위(안)에서는 전환단계를 명시하지 않은 반면, 허태열 의원(안)에서는 광역단체 예하의 2/3가 독립되면 道 폐지를 제안하였고, 권경석 의원(안)은 먼저 道の 기능을 국가사무로 전환한 다음 광역행정기관을 설치하여 현존 道를 폐지하는 단계적 전환을 제의하고 있다. 전환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앞의 두 개편(안)에서는 존치되는 특별시·광역시는 선출직으로 설정한 반면, 권경석 의원(안)은 특별시·광역시는 선출직, 전환단계에서의 道는 임명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현행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광역화한다는 점이다. 인구규모, 지리적 여건, 생활권, 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되 기존 자치구, 통폐합된 시·군 지역에는 행정구를 설치하고, 행정구 내 하부행정기관으로 읍·면·동을 두어 주민자치기관화 한다는 것이다. 단지 국회특위(안)과 권경석 의원(안)은 구체적인 통합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반면, 허태열 의원(안)은 현행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 70만을 기준으로 70여개로 통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셋째, 현행 道를 폐지하되, 초광역행정기구를 설치한다는 점이다. 국회특위(안)에서는 초광역 지방광역행정기구의 설치, 허태열 의원(안)에서는 전국을 5~7개의 광역권으로 구획하여 지방광역행정청을, 권경석 의원(안)에서는 “5+2 광역경제권”과 연계된 대광역 행정기관을 중앙정부에서 설치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찬반 논리

이와 같은 행정체제·구역개편(안)은 많은 학자, 전문가 등이 주장해온 필요성의 논리를 반영한 것으로, 지금까지 행정구역·체제 개편에 관련된 찬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1. 찬성논리

찬성논리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자치시대 주로 행정적 차원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광역자치체인 道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를 현실적으로 통합하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교통·정보통신 기술보급으로 행정서비스의 변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 행정서비스의 내용이 시간적·공간적으로 단축되고 주민의 생활범위가 더욱 넓어져 기존 행정구역과는 다른 주민들의 생활권, 경제권, 문화권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인구 감소로 인한 자치기반의 약화

우리나라 8道の 행정체제는 조선시대 농경사회를 기초로 구성되었으나 이제 농·어촌지역의 인구는 감소하여 그 지역을 자치지역으로 운용하기에는 많은 비용을 수반하게 된 반면, 도시지역 인구는 증가하여 새로운 행정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향후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자치 2계층제를 단순화해서 대도시 행정체제를 구축, 자치단체 간 갈등도 해소하고 행정의 일체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계층·중복구조로 인한 행정거래비용의 과다

현행과 같은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2단계 행정계층은 기능중복은 물론 과다한 인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고비용·저효율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행정기능상으로 보면 계층수가 많아, 문서전달과정에 필요단계가 늘고, 동시에 동일한 과정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소용되는 시간, 노력 및 비용이 커진다는 것이다.

道の 단순 중계기관화 및 사무배분의 중복현상

현재 광역자치단체인 道는 자체 고유사무보다는 중앙부처의 업무를 시·군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와 주민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道의 기능은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기초지자체에 대한 불필요한 감독, 조정, 규제기능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원스톱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道를 폐지하고 중앙정부~기초지자체의 2단계 행정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시·군행정의 규모불경제

현행 기초지자체인 시·군의 인구·면적·재정규모의 편차가 심하여 지역균형개발이 곤란하

고, 행정서비스의 수혜 불균형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충남의 경우에도 인구 53만의 천안시가 있는 반면 인구 3만4천의 청양군이 있기 때문에, 현행 행정구역으로는 도시의 과대성장과 농·어촌의 空洞化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의 경우 인구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집중되는 경향을 지닌 반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행정서비스가 감소되기 때문에, 현행 행정구역으로는 지역균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의 시·군의 경우, 기관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유능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며, 기초자치단체의 과다로 동일유형의 행사비,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중복되어 비효율적 행정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2. 반대논리

찬성논리에 대하여 반대주장은 행정구역·체제의 개편·통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면 동의하지만,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정서 고려

행정구역개편은 주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행정구역은 주민정서의 밑바탕이 되어 있으므로 행정구역은 단순 행정편의의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특히 道와 관련하여 100년 이상 주민들은 광역지자체에 귀속감을 갖고 있으므로 광역지자체 폐지는 주민정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생활권과 정서 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구역개편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 계층 간, 지역 간 정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역사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적 갈등이 크게 우려되므로, 그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광역지자체를 없애는 것은 지역경쟁력 강화에 역행

도단위 광역지자체를 폐지하려는 근거로 찬성론자들은 세계화에 따른 지역경쟁력 강화를 들고 있다. 세계화시대 선진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역단위에서의 규모의 경제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구 500만 명 이상의 자치단체로 행정구역을 통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세계적 경향에 발맞춘 광역화, 집적화, 브랜드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道단위 광역지자체 폐지보다는 경제권역에 상응하는 초광역행정체제로 보완하는 것

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즉, 道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70개로 통·폐합하여 중앙정부-통합 시·군·구의 2계층제를 구성할 경우, 지역단위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고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도 없다. 시·군·구를 광역화하면 오히려 낙후된 지역이나 사람이 적게 사는 지역에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광역지자체 폐지는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로의 회귀를 의미

현 행정체계에서 광역행정은 道가 담당하고 있는데, 道를 폐지할 경우 중앙정부가 광역행정을 담당하게 되어 중앙집권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제와 같이 지역단위의 사무범위가 광범위하고 지방자치의 역사가 긴 정치행정체제의 경우에는 중앙집권의 심화가 초래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한 국가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스스로 산업·경제·외교 등을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앙집권화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역지자체의 폐지는 지역이기주의를 심화시킴

도단위 광역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사무를 위임받아 도차원에서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기도 한다. 반대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요구를 받아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간 중개역할을 수행하며, 기초지자체 간 행정업무를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단위 광역지자체를 폐지할 경우 중앙정부로의 filtering 기능이 제약되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왜곡되어 중앙으로 전달될 수 있고, 기초지자체 간 조정과 협력기능이 상실되어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상·하 지방행정계층간 불합리한 기능배분의 개선이 선결문제임

현행과 같은 3단계 행정계층을 2단계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행정기능의 통폐합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던 재료를 2개의 용기로 나누어 담으려면, 그 종류가 먼저 선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의 자치사무를 발굴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하려고 추진하였지만, 그 성과는 미약하였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분하기 어려운 행정이 많고, 또한 지방에 주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중앙부처의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계층의 통폐합을 결정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계층의 단순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와의 기능적 정리, 그리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의 권한과 기능 조정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체제개편 추진방향

행정체제·구역의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때로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 간 감정을 해소하는 방편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는 행정의 필요성 차원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본고의 목적이 향후 우리나라의 행정체제개편(안)을 제안하는 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체제 개편(안)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논의구조 속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정치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의원발의의 형태로 제시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먼저 행정체제·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앞에 언급한 찬·반 주장 등을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 조사와 협의를 위한 공식적인 논의구조를 만들고 이 구조 속에서 개편(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2010년을 목표로 하는 허태열 의원(안)이나 2014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안)과 같이 국민의 공감대를 전제하지 않고 선거일정에 맞추어 행정체제를 개편해서는 안 된다.

행정체제·구역 개편은 많은 갈등의 소지를 포함하고 있다. 향후 통·폐합되는 행정구역의 설정, 통합 지자체의 청사소재지 및 통합 지자체의 이름 선정, 통합 공공시설 위치의 문제, 선거구의 문제 등 행정체제개편은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편 시기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 혹은 광우병 사태와 같이 국론이 분열된 시기에는 행정체제·구역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행정구역 개편은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 및 기능배분 관련 논의와 병행되어야 한다. 道단위 광역지자체의 폐지를 논하기 전에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기초지자체간 등 기능과 권한의 배분이 선행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행정계층간 기능과 역할도 단시일 내에 조정되기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의 논의도 없이 단기간에 광역지자체 폐지를 포함한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할 수는 없다.

셋째, 행정체제·구역개편문제는 “새로운 국가의 틀”이라는 거대 담론구조에서 개편되어야 한다. 행정체제·구역 개편문제가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 증대나 지역감정해소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헌법이 여러 번 개정되었어도,

행정체제와 행정구역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예증하고 있다. 행정구역개편은 국내적으로는 경제권, 문화권, 생활권뿐만 아니라 통일이라는 미래 한반도의 모습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광역자치단체의 폐지보다는 초광역자치단체의 육성이 세계적 대세이다. 광역자치단체인道を 폐지하는 것은 행정구역을 단순히 행정서비스의 공급단위 및 생활권의 개념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화시대 행정구역은 경제권의 의미가 더 중시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광역행정구역을 폐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인구 500만 정도로 통합하여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따라서 道を 초광역자치단체로 통합하여 국제적 수준의 지역경제권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행정구역 개편에서는 지역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고려해야 한다.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무시하면 개편 자체도 어렵거니와 지역 전통과 개성의 상실, 주민 간 연대의식 약화로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

행정구역과 계층구조의 개편은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엄청난 문제이다. 그러나 행정구역개편의 내부에 내재하고 있는 파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없이 주장을 전개하는 경우들이 있다. 물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은 시급히 조정해야 하나 이 경우에도 우리는 경계조정과 구역개편을 혼동해서는 안 되며 선거구를 정하기 위한 잣대로 정체성이 해체되고 일체감도 없는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구역의 합리적 개편은 많은 나라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나 구역개편을 쉽게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비용에 대한 효과의 실효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행정구역과 계층제의 개편에는 함께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 장점만으로 주장해서는 더욱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추진해야 한다면 결코 단시간에 이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선택은 당연히 국민의 몫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2005), 지방분권, 지방사무배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2. 김병국(2000), 21세기의 지방자치행정체제 개편방안.
3. 김석태(2002), 광역시·도 통합론 비판과 그 대안.
4. 박종관(2000), 통합시의 조직통합 효과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1권 제2호..

광역경제권역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방안

최진혁 |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I. 서론 : 문제제기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설정은 그동안 정부수립 후 반세기 이상 내국적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균형발전과 중앙집권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정치행정체제,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갈등구조로는 더 이상 효율적인 국가발전(국가경쟁력 제고)을 이룰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경 없는 세계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도시를 창출해야 하고, 지역별 비교우위를 토대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확충하여 지역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정부의 지방분권을 실질적인 지방분권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협력방식으로 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및 각 지역 간 발전적 분업구조 형성과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간 동반·상생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명박 정부는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초생활권과 5+2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을 구상하고 있고, 신성장동력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제17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다가 중단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이명박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다시 진행하고자 하고 있다. 즉, 현 지방행정체제는 1896년 13도제를 채택한 이후 100년 넘게 중앙집권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오늘날과 같이 교통·통신이 발달된 정보화시대에 부합하기

어렵고, 경제활동구역과 행정구역불일치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강요하고 있고, 다계층제로 인한 기능의 중복과 예산, 인력의 낭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정치사회의 해묵은 지역 감정문제를 노출하고 있어 개편의 필요성이 정당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계층을 1단계 감축하기 위하여 도를 폐지하고, 시·도와 시·군·구를 통합하여 전국을 60~70개 전후의 ‘통합광역시’로 재편하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충청남도가 어떠한 환경변화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여 정부가 내세우는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착근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대응과제)을 강구하여야 하는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¹⁾

II. 충청남도 행정환경변화와 전망

: 5+2광역경제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 하의 충청남도의 위상 및 지위

1. 5+2광역경제권 하의 충청남도의 위상 및 지위

신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표 1〉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전략

단 계	범 위	개발방향	개발방법
기초생활권	163개 시/군	기초수요(삶의 질) 충족	정주여건 개선, 도농통합적 개발, 지역계정(포괄보조금)
광역경제권	16개 시/도를 7개(5+2) 광역경제권으로	광역경제권 형성 및 경쟁력 제고	지역간 연계협력 발굴/촉진, 광역계정
초광역개발권	3대 해안벨트(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접경지역벨트(남북교류)	열린 국토 구현	국가주도, 국제적 연계협력, 일반회계, 민자 활용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8)

1)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 전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단위로 차별화된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배경에서 대전, 충남, 충북의 광역자치단체를 묶어 광역경제권으로 할 경우 충남의 위상은 이 광역경제권을 자치단체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면서 단순한 광역경제권역의 공영조물기관으로만 부여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에 의하면 초광역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갖는 것이므로 충남은 대전과 충북과의 광역경제권역청을 두고 경쟁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광역경제권역의 중심도시로서의 부상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 준비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영조물기관으로서 경제권역으로 남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치단체의 지위는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전과 충북과의 자치단체 간 협력관계의 틀 속에서의 공공기관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대전, 충남, 충북의 광역자치단체를 묶어 광역경제권으로 할 경우 충남의 위상은 이 광역경제권을 자치단체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면서 단순한 광역경제권역의 공영조물기관으로만 부여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에 의하면 초광역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갖는 것이므로 충남은 대전과 충북과의 광역경제권역청을 두고 경쟁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광역경제권역의 중심도시로서의 부상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 준비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영조물기관으로서 경제권역으로 남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치단체의 지위는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전과 충북과의 자치단체 간 협력관계의 틀 속에서의 공공기관의 지위를 갖게 된다.

1) 법인격을 가진 초광역자치단체로서의 지위부여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초광역자치단체로서 지위를 부여할 경우 그에 따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관장하는 지방정부구성형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충남의 집행부와 지방의회와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준비해야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초광역자치단체와 충청남도간의 기능배분, 자원배분, 인력배분, 지도감독, 협력체제 등도 분권화의 논리에 맞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제구역(공영조물기관)으로서의 지위부여

광역경제권역을 자치단체가 아닌 경제구역으로서 공영조물(etablissement public)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독립된 의사결정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충청권(광역경제권) 주민의 참여 하에 집행부와 의회가 관여하여 자체적으로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충청권 안에 존재하는 3개 광역자치단체 간(대전, 충남, 충북)의 협력방식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이 경우 광역경제권을 대표하는 집행부와 의결기관을 어떠한 지위로 하여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즉, 광역경제권의 업무를 수행할 집행기관장과 의결·심의하는 지방의회의 구성과 지위를 3개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장과 지방의회의 논의를 통하여 협의체 중심의 기관구성으로 준비해가야 한다.

2. 충청남도의 행정환경변화

1)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신정부는 지역발전의 동인을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보아 지역이 원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시·도 전략산업 분야 간의 연계와 융합을 통한 신산업을 창출하며, 다음과 같이 광역경제권의 1~2개 선도전략산업을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끌어 내어 일자리 창출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①수도권 : 금융, 비즈니스, 물류 등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 ②강원권 : 의료, 관광
- ③충청권 : 의약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 ④대경권 : 에너지, 이동통신
- ⑤호남권 : 신재생에너지, 광소재
- ⑥동남권 : 수송기계, 융합 부품소재
- ⑦제주권 : 물산업, 관광레저산업

따라서 충청남도는 과학기술 산업화에 따른 첨단/지식기반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혁신체제 구축, 전문고급두뇌들의 일상생활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주여건, 자녀교육 등 인프라 구축, 과학과 기술의 산업화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등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될 것이다.

2) 지역적 기능과 위상변화

충청남도는 그 지리적인 위치로 보아 서해안 거점항만 조성으로 환황해경제권의 주요 교류 거점으로 그 기능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교역과 교류증대에 따라 서해안의 역할이 활성화되어 외교적 협력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3) 고속 간선교통, 정보체제구축에 따른 국토중심지 기능강화

충청남도는 충청권이 도로, 철도 등 국가간선교통망의 중간결절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21세기 고속전철 건설, 초고속정보망의 구축,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에 따라 국내지역 간 물류유통의 주요 결절지역으로서 명실상부한 국토중심지의 기능수행이 가능한 여건을 활용하려 할 것이다.

4) 역사문화/경관자원의 육성

역사성이 있는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개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산업화의 요구가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해양, 호수 및 산악관광자원의 연계와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등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3. 지방행정체제개편안에 따른 충남의 위상

그동안 정치권의 논의에서 학계의 선행연구에 이르기까지 제시된 개편 대안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일곱 가지 대안들로 요약할 수 있다(하혜수, 2008 : 6-9). 즉, 도 폐지와 시·군 통합 광역시로의 단층제안, 도와 시·군의 기능 분리안, 도의 국가기관화안, 광역시와 도의 통합안,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폐지안, 특례시안, 초광역지방정부(강소국연방제)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행정체제개편안 중에서 충청남도의 위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안을 보면 도 폐지와 시·군 통합 광역시로의 단층제안과 광역시와 도의 통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충남의 대응과제는 무엇인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1) 도 폐지와 시·군통합 광역시로의 단층제안

현행 농촌지역의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남도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통합하여

60~70개 정도의 통합광역시로 재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안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규모의 경제를 통한 행정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광역도가 폐지됨으로써 그만큼 정치적 위상이 약화될 것이고, 중앙정부의 관여 내지 통제가 통합광역시에 직접 투입되어 중앙집권으로 회귀할 수 있는, 그리하여 분권국가체제구축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이 안은 충청남도는 폐지된다기보다 충청남도 안에 있는 시·군이 폐지되고 몇 개의 통합광역시로 분할하는 모습이다.²⁾ 따라서 충청남도는 도 폐지론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여야 한다. 즉, 현재의 도 체제는 오랫동안의 지역 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을 포함한 역사성에 토대를 두고 있어 주민의 정서를 반영한 지역단위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인위적인 접근은 지역민의 반발을 사 국론분열을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도 폐지는 그나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도의 공간을 세분화시켜 역량을 약화시킴으로써 대도시(서울, 수도권)와의 불균형격차를 심화시키게 된다. 실질적인 분권정책추진 없는 도 폐지는 지방행정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고, 정치적 위상이 높은 도지사 폐지로 지방정치권은 중앙의 정치적 시너로 전락하게 되어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집권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2) 도와 시·군의 기능 분리안

현재의 자치2계층제를 유지하면서 기능분리에 초점을 두어 도와 시·군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는 광역적·조정적 사무로 한정하고 나머지 주민생활 관련 모든 사무는 시·군에서 처리하도록 하며 도의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구조개편 없이도 기능조정을 통해 기능중복을 방지하고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명확히 할 수 있고, 도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다른 대안에 비해 비교적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능(사무) 구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시·군에 대한 도의 감독관행이 지속될 수 있으며,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체제개편의 명분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 안에 따를 경우 충청남도는 도와 시·군의 기능배분을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시행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실질적 지방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배분 원칙과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2)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도폐지, 시·군 통합"은 본질과 실제로 볼 때 오히려 "도분할, 시·군 폐지"라고 보아야 한다. 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여러 개로 쪼개어 16개 시·도를 60~70개의 광역시로 분할하겠다는 것으로 본다. 이는 시·군을 광역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기우, 2008 :5).

3) 도의 국가기관화안

도의 기능을 시·군에 대폭 이양하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도에 통합시켜 도를 국가기관화하자는 것이다. 이 안은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고, 국가정책과 지방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와 분권국가체제에의 역행,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없음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위상약화가 예상된다. 이 경우 충청남도는 국가에 완전 종속하게 되어 지방화 및 분권국가체제구축에 역행하는 꼴이 되어 시민사회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4) 광역시와 도의 통합안

그동안 도농분리구역개편에서 오는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도농통합구역개편을 모색할 수 있는데, 본래 동일한 뿌리의 지리적 특성과 역사성, 광역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치를 두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광역시는 도의 관할 안에 두되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대전광역시와 통합되어 보다 광역화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원래 같은 뿌리의 지역정서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그동안 분산 투자되고 있는 행·재정적 비용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위상이 강화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지방정부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그러나 광역시의 상대적인 위상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대도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예상된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대전시와 같은 대도시행정의 특성을 감안한 행·재정체제를 구축하여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준비해야 하고, 소도시와 농촌도시 등에 적합한 행·재정체제를 준비하면서 상호 협력보완이 활성화되는 통합 행·재정서비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5)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폐지안

특별시와 광역시에 존치하였던 자치구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는 자치구제를 폐지하여 행정구제로 할 수 있고 또 다른 안으로는 준자치구제로 할 수 있는데, 여하튼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의 통합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는 대도시 전체로서 종합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대도시 행정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광역화를 통한 분권국가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단층제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에 의한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할 수 있음이 큰 제약요인으로 대두된다.

6) 특례시안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에 상응하는 행·재정 특례 및 국가의 지도감독 특례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는 대도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여 다른 시 지역과 다르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추진이 가능하고, 자치역량에 상응하는 자치권 부여 등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럴 경우 충청남도는 자기관할 안에 있는 대도시가 특례로서 관리되기 때문에 충남도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종합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과 대도시간의 기능배분과 권력배분, 지도감독 내용을 분권화의 논리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7) 초광역지방정부 (강소국연방제)

이는 기존의 시·도를 초월하는 초광역지방정부를 창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권과 생활권에 따라 6개~7개로 구분하고 있다.

- (1) 경제권 중심 : 6개 - 서울, 중부(인천, 경기), 서부(대전, 충남북, 전북), 남부(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동부(대구, 경북, 강원), 제주권
 - 시군구기초자치단체를 200여개의 시로 자율통합
- (2) 생활권중심 : 7개 - 서울, 경기, 충청, 호남, 경상, 강원, 제주권
 - 시군구기초자치단체를 120~140개로 점진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이는 자원의 집중을 통한 지역경제의 시너지효과,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주정부에 버금가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분권체제를 강화할 수 있고, 강력한 지방정부의 창설을 통한 국가경쟁력(인구 500만~1,000만 명의 강소국가)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충청남도는 광역경제권역서 고찰하였듯이 기존의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하에서의 통합정치·행정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권력구조, 기능배분, 지도감독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주정부에 버금가는 지위와 권한을 초광역지방정부에게 부여하게 됨으로써 단방제 국가체제의 기본틀을 초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헌법 개정과 이를 통한 국가체제의 개편을 요구하게 됨으로 정치논쟁과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지역

감정을 고착화시켜 신지역주의를 정당화하여 주고 그림으로써 국가통합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III. 결론 : 충청남도의 과제

5+2 광역경제권에 따른 과제

1) 광역경제권역의 정치·행정체제 구축

광역경제권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조직하고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와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우선 기관구성형태에 따른 권한배분 및 지도감독을 어떠한 원칙과 기준으로 할 것이며, 다음으로 광역경제권의회와 광역경제권도지사의 지위, 역할을 규정하고 그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2) 지역특화발전 모색

광역행정체제 구축 하에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논의되어 온 4대권 개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최진혁, 2003 : 360).

- ①서해안권 : 태안해안 국립공원, 안면도, 부여를 연결하는 서해안 지역으로서 해양레저 기능과 중국과의 교역기능을 강화하여 국제관광 및 환황해권 전진기지로 중점 육성한다.
- ②백제권 : 백제의 고도인 부여, 공주축을 중심으로 교육, 관광, 문화기능을 복합/발전시켜 국제적인 문화권으로 육성한다.
- ③북부권 : 천안, 아산, 당진축을 신산업지대로 육성하여 수도권과의 기능분담과 21세기 중부권 교역 및 산업중심지로 육성한다.
- ④금강권 : 금강수계의 치수개발을 통하여 물류, 유통산업, 근교농업 등 대도시 연계기능 특화와 중소규모의 자족적 전원도시로 개발한다.

3) 다른 광역경제권과의 협조체제구축

다른 광역경제권과 협조체제가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도권, 강원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치·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과제

1) 도폐지와 시·군통합 광역시로의 단층제안

만일 이 안이 적용된다면 충청남도는 폐지되어 광역시로 분할되는 것이므로 충청남도의 위상은 크게 손상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강조했던 집권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논리를 강변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이 채택될 경우 충청남도의 우리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국가의 행정구역 내지 공영조물기관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충청남도는 국가의 지방행정이 실현되는 지점으로서 국가의 의사가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집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존치하도록 해야 한다.

2) 광역시와 도의 통합안

만일 이 안이 적용된다면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통합되어 과거의 충청남도 안에 대전시가 속하게 되는 과거의 정치·행정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같은 뿌리의 지역정서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통합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대전시와 같은 대도시행정의 특성을 감안한 행·재정체제를 구축하여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정치·행정체제를 준비해야 하고, 소도시와 농촌도시 등에 적합한 행·재정체제를 준비하면서 상호 협력보완이 활성화되는 통합 정치·행정(행·재정서비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기우(2008).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개편론에 대한 대안적 제안",
 최진혁(2003). "충청권 행정환경의 변화와 발전과제", 사회과학연구 제14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최진혁(2008).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내용과 전망 : 대안검토를 중심으로", 대전발전연구원/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논문집.
 최진혁(2008). "이명박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발전적 고찰", 한국정책학회 2008년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하혜수(2008).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전략 및 체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단체 자율통합방안 모색, 한국지방자치학회/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공동세미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8). 지역발전정책.
 Baguenard, Jacques. (1996). La décentralisation. Paris : P.U.F.
 Baguenard Jacques et Becet, Jean-Marie. (1995). La démocratie locale. Paris : P.U.F.
 Bécet, Jean-Marie. (1996). Les compétences de la commune. CNFPT, Les collectivités locales en France, Paris : La documentation française.

새정부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충남의 도시재생 방향

송두범 · 임준홍 · 윤정미 | 충남발전연구원

1. 서론

인구저성장시대¹⁾, 녹색성장시대의 도시정책의 큰 흐름 및 전략은 도시재생이다. 이에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부터 도시재생시스템연구²⁾가 본격화되었으며, 새정부도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해서도 대도시와 농산어촌을 연결하는 중소도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소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자산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이 필요하며,

그 수단으로서 도시재생은 중요하다. 이에 지난 12월 15일 새정부는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에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재생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연결하는 자립적 지역 발전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³⁾

본 연구는 16개 중소도시로 구성된 충남의 쇠퇴실태와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성격을 고려하여 충청남도과 시·군의 도시재생 기본방향 및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1)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2018년을 정점(49,340천명)으로 감소한다고 예측하고 있으며(통계청, 2007.5,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p.5 참조), 129개 지방 중소도시 중 106개 도시가 5년 전에 비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이미, 인구감소기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음
- 2) 참여정부는 '삶의 질' 향상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건설교통 R&D 육성을 위해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VC-10)」을 작성하고, 향후 10년간 6조5천억 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이 10대 과제에는 '도시재생시스템' 연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시스템' 연구에는 크게 4개의 핵심과제가 있으며, 이 중 제1핵심과제에 '지방 중소도시 유형별 재생기법개발(1-1세부과제)'이 주요과제로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이 주연구기관으로 수행 중에 있음
-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12.15,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 발표」 보도자료 참조

II.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도시재생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중앙부처간 이해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소액·중복투자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지나치게 폐쇄적이며, 지방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과 지역 간의 협력

및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간 상생구도와 지역별 특화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자체 개발한 지역발전사업에 대해 포괄적 재정지원⁴⁾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형식적 평가”가 아니라 “평가와 재정·사업을 연계한 전략적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표 1〉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특징

구 분	중전 지역발전정책(AS-IS)	신지역발전정책(TO-BE)
목 표	· 지역간 대립구도 · 산술적·기계적 균형화	· 지역간 상생구도 · 지역별 특화발전
사 업	· 기존 보존사업의승계 - 다양한 성격 사업의 혼재 - 사업의 과도한 세분화 - 유사중복 사업 · 형식적, 분산적 낙후지역사업	· 지역발전사업으로 재편 - 부적합사업의 이관 - 사업성격별 통폐합, 정비 - 유사사업 사업군화 · 실질적, 체계적 낙후지역사업
추진체계	· 중앙부처 중심 - 중앙→시·군 · 지역혁신협의회 기능 미약 - 협의기능 중심 · 행정구역 단위 추진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중심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시·도 · 지역발전협의회로 개편 - 지역거버넌스의 중심기능 · 자치단체간 협력·상생 촉진
예산·재정구조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사업유형별 계정구분 - 지역혁신계정/지역개발계정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권역유형별 계정구분 - 광역발전계정/지역개발계정
지원방식	· 개별사업별 보조 · 사업별 중앙부처 사업배정 · 획일적 지원	· 사업군별 포괄보조 · 사업군별 지자체 사업선택 · 차등지원
평가방식	· 형식적 평가 - 평가 환류 미흡	· 전략평가 - 평가와 재정·사업 연계

자료 : 조기현, 2008.11,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추진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 p.36 참조

4) 새정부는 균특회계 재원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200여개 지역개발사업을 21개로 통폐합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분권적 지역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새정부의 기초생활권 추진계획 5대 실천 전략 중 하나인 “시·군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부분을 보았을 때,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에 따른 지역간 협력과 상생이 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한편,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에서 중소도시재생에 대해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정비, 구도심재생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연결하는 자립적 지역발전 거점 조성 and 대도시 연계 통합개발 및 자족적 발전이 가능한 시·군의 구시가지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주택정비사업에서 벗어나 문화·주거·복지·일자리 창출이 종합된 복합적·생산적 재생사업의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2009년 중 「도시재생지원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도시재생정책은 목표, 추진체계, 지원방식, 평가방식에서 참여정부와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중소도시재생에 대한 기본방향과 제도적 틀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Ⅲ. 충남 중소도시 쇠퇴 실태

1. 충남 중소도시 현황

충남의 중소도시들은 수도권 중소도시에 비해 인구증감율, 노후주택비(1985년 이전주택), 단위사업체규모, 고령화정도,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등 많은 지표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지방 중소도시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16개 시·군별로 2000년 대비 인구변화를 보면 수도권 주변에 위치하여 효과를 강하게 받고 있는 천안, 아산과 계획신도시인 계룡시는 뚜렷이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대부분 도시는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대 기업체의 입지는 천안, 서산, 아산 등에 12개와 7개 정도 위치하고 있으나 시·군 9곳은 전혀 입지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재정자립도 역시 천안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5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이 충남의 도시들은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에 있는 천안, 아산, 계룡 등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정주환경(인구, 노후주택), 경제기반(사업체규모, 1,000대 기업수), 재생역량(고령화, 재정) 모두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충청남도 중소도시 현황

구 분	인구증가율 (00-05년, %)	노후 주택비(%)	인구대비 중사자(%)	1개 사업체 당중사자수	1000대 기업체 입자수	고령 인구비(%)	재정자립도 (2006년)	재정력지수 (2006년)
중소도시	4.8	21.4	30.1	4.7	313	10.9	27.6	33.7
수도권	15.9	10.1	29.4	5.1	145	7.5	46.2	81.2
지방권	-1.9	28.0	30.6	4.4	168	13.3	23.0	22.3
충남도	2.4	25.1	31.2	4.7	31	14.1	27.5	25.5
천안시	24.9	12.9	34.9	5.4	12	7.2	51.77	69.14
공주시	-2.5	27.7	26.0	4.0	1	16.3	21.76	22.71
보령시	-11.3	32.3	29.5	3.7	0	16.1	24.89	24.9
아산시	15.3	18.7	39.7	7.3	7	11.5	46.46	54.42
서산시	0.7	25.5	28.4	4.5	7	13.4	36.64	25.08
논산시	-8.8	31.3	27.0	3.7	0	17.0	21.34	19.74
계룡시	16.9	6.7	18.4	4.2	0	6.6	28.66	17.92
금산군	-7.5	39.3	34.0	4.0	0	20.7	21.95	17.13
연기군	1.0	30.0	34.2	5.3	1	15.3	27.89	24.43
부여군	-12.2	32.3	23.4	3.6	0	22.2	15.02	14.05
서천군	-13.5	36.7	29.8	3.9	0	23.3	15.1	15.7
청양군	-18.9	40.1	26.3	3.7	0	25.5	15.94	10.78
홍성군	-8.7	33.1	25.9	3.6	0	18.5	18.01	16.46
예산군	-16.1	30.8	26.8	3.8	1	19.7	20.02	17.97
태안군	-10.9	36.9	26.3	3.4	0	18.2	38.96	29.18
당진군	-3.7	26.3	30.7	4.6	2	16.5	36.04	27.86

* 중소도시, 수도권, 충남도의 재정자립도는 해당 시·군을 평균한 값임

2. 충남 중소도시 쇠퇴 실태

1) 쇠퇴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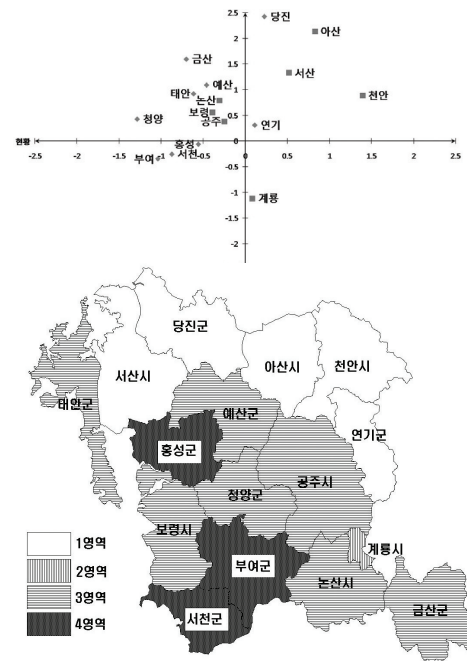
쇠퇴지수⁹⁾를 통해 129개 지방중소도시(특별

시, 광역시, 수도권 제외)의 상대적 쇠퇴실태를 분석한 결과 충청남도 중소도시는 전술한 개별지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특히, 수도권영향을 받고 있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과 세종도시 건설 영

향을 받고 있는 연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에 반해 홍성, 서천, 부여는 쇠퇴현상이 심각한 3영역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지역

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도시이다.

구 분	복합쇠퇴지수	
	현 재	추 세
천안시	1.3953	0.8873
공주시	-0.2477	0.3801
보령시	-0.3908	0.5597
아산시	0.8286	2.1383
서산시	0.519	41.3286
논산시	-0.3050	0.7880
계룡시	0.0843	-1.1248
금산군	-0.7000	1.5941
연기군	0.1130	0.3105
부여군	-1.0377	-0.3437
서천군	-0.8717	-0.2560
청양군	-1.2839	0.4266
홍성군	-0.5568	-0.0608
예산군	-0.4595	1.0901
태안군	-0.6141	0.9208
당진군	0.2275	2.4251



〈그림 1〉 충청남도 중소도시 현황

※ 현황 및 추세값은 복합쇠퇴지수 값을 z-score로 표준화하여 획득하였음

앞의 3가지 부문에 대해 쇠퇴정도를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부문에서는 태안, 주택부문에서는 공주, 보령, 논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이, 경제부문에서는 계룡, 홍성이

상대적으로 쇠퇴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⁶⁾ 특히, 충남지역의 주택노후화 상태는 16개 시·군 중 9개가 3영역에 포함되어 (56.25%),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쇠퇴지수는 인구사회부문, 주택부문, 경제부문의 변수를 이용하여 단순순위화방법을 이용한 표준화와 요인분석을 통한 가중치를 통해 쇠퇴지수를 산정하였음. 쇠퇴정도를 위한 사분면 분석은 z-score 방법을 통해 현재측과 추세측으로 구분하여 각 도시별 분포를 본 것임. 예를 들어, 사분면 구분에서 제3영역에 위치한 도시는 현재의 쇠퇴상태가 심각하며, 동시에 추세적인 측면에서도 쇠퇴정도가 심각한 도시임(도시재생사업단 1핵심과제 1-1세부과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분석한 결과임)

〈표 3〉 충청남도 중소도시 현황

구 분	인구사회부문		주택부문		경제부문	
	현 황	추 세	현 황	추 세	현 황	추 세
천안시	0.0250	-0.2318	0.0102	0.9463	1.5773	0.9765
공주시	-0.0003	0.1245	-0.0068	-0.4639	-0.2738	0.7513
보령시	-0.0091	0.5799	-0.0085	-0.723	6-0.1330	1.3811
아산시	0.0159	0.5832	-0.0069	0.4082	1.6884	1.7592
서산시	0.0054	0.1236	-0.0009	0.2598	0.9140	1.5499
논산시	0.0065	1.8962	-0.0197	-2.1153	-0.1112	1.3466
계룡시	0.0289	-1.3982	-0.0025	0.0557	-0.5813	-0.2472
금산군	-0.0091	1.1729	-0.0224	0.2598	0.1844	1.3084
연기군	0.0056	0.4756	-0.0098	-0.4824	0.7603	0.2907
부여군	-0.0196	0.2922	-0.0115	-0.8164	-1.0282	0.2674
서천군	-0.0238	0.6225	-0.0137	-1.3360	-0.2890	0.9788
청양군	-0.0249	0.2658	-0.0039	-0.6309	-0.8916	0.9520
홍성군	-0.0077	0.9743	-0.0186	-0.0371	-0.8110	-0.0041
예산군	-0.0080	0.8486	-0.0048	-0.0186	-0.4306	1.4862
태안군	-0.0075	-0.6342	-0.0098	1.1875	-0.5289	0.5638
당진군	0.0066	1.3928	-0.0128	0.0928	1.0751	2.1491

2) 쇠퇴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 충남의 중소도시들은 수도권에 비해서는 쇠퇴·침체를 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 중소도시에 비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충남의 중소도시에 대해 전문가(공무원) 의식조사⁷⁾ 결과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정체와 쇠퇴를 우려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성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6) 3가지 부문에서 인구사회부문에 이용한 변수는 노령화지수, 순이동률, 평균인구성장률, 1000명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1000명당 소년소녀가장가구원수, 1000명당 사설학원수, 지역가입자보험료(2005년)이며, 주택부문에 이용한 변수는 공가율, 노후주택비율이며, 경제부문에 이용한 변수는 1인당 지방세징수액(천원), 유형자산 연말잔액(백만원), 1000명당 종사자수, 사업체수당종사자수, 재정자립도임

7) 설문조사는 충남발전연구원이 '도시쇠퇴 유형별 재생기법 개발'을 위해 충남, 강원, 전북, 경북 등 62개 시·군의 도시계획, 지역경제, 관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07년 12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25일 동안 방문, 우편, E-mail, 팩스를 통하여 배포하였으며, 총 655부를 회수한 것 중 충남의 경우만을 분석한 것임(설문조사 통계값은 이하 동일)

〈표 4〉 도시변화에 대한 인식

구 분		매 우 쇠퇴	쇠퇴	약 간 쇠퇴	정 체	약 간 성 장	성 장	매 우 성 장	전 체	Chi-Square
현재	시급도시	-	3.4	3.4	13.8	37.9	34.5	6.9	100.0	7.078 (.314)
	군급도시	5.3	5.3	5.3	36.8	21.1	15.8	10.5	100.0	
	전체	2.1	4.2	4.2	22.9	31.3	27.1	8.3	100.0	
미래	시급도시	-	3.4	-	13.8	37.9	34.5	10.3	100.0	2.590 (.763)
	군급도시	-	-	5.3	15.8	36.8	36.8	5.3	100.0	
	전체	-	2.1	2.1	14.6	37.5	35.4	8.3	100.0	

〈표 5〉 도시내에서의 주요 쇠퇴지역

구 분	구도심 상점가	도심의 주거지	일반 주거지	산업단지 주변지역	도시 전체	기타	전체	Chi-Square
시급도시	55.2	13.8	6.9	3.4	3.4	17.2	100.0(29)	11.064 (.050)
군급도시	42.1	10.5	21.1	-	26.3	-	100.0(19)	
전체	50.0	12.5	12.5	2.1	12.5	10.4	100.0(48)	

도시에서 가장 쇠퇴를 우려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구도심 상점가이며, 그 밖에 도심의 주거지와 인접한 일반주거지역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쇠퇴 원인에 대해서는

주변도시의 성장을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였고, 기반산업 약화, 일자리 감소 등 경제적 원인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 부족도 큰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6〉 도시쇠퇴의 원인(제1원인)

구분	교통 통신 발달	주변 도시 성장	개발 가용 토지 부족	공원 녹지 공간 부족	환경 오염	기반 산업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상업 업무 기능 약화	토지및 건축물 가격 상승	편의 시설 정비 부족	교육 서비스 부족	전체	Chi-Square
시급도시	6.9	51.7	-	3.4	6.9	13.8	6.9	-	-	6.9	3.4	100.0(29)	22.243 (.014)
군급도시	10.5	5.3	5.3	-	-	26.3	15.8	5.3	10.5	-	21.1	100.0(19)	
전체	8.3	33.3	2.1	2.1	4.2	18.8	10.4	2.1	4.2	4.2	10.4	100.0(4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적 지표와 중소도시의 상대적 쇠퇴정도 비교, 공무원 의식조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천안, 아산, 서산 등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도시를 제외하고는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성장하는 도시마저도 도시내부쇠퇴를 염려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구도심내 상점가, 주거지 등의 쇠퇴를 우려하고 있었다.

IV. 충남의 도시재생 기본방향 및 대응 전략

1. 기본 방향

도시쇠퇴를 극복하기 위해 가정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산업경제 육성과 주거여건 개선을 들고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

을 기본적으로 인식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재생정책에서는 해당 도시가 갖고 있는 비전과 미래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적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특히,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성격과 지방도시 재생사업의 기본적 방향을 명확히 이해한 창조적 도시재생사업 발굴이 요구되며, 그 기본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은 지역 경쟁력강화, 일자리 창출,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발굴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민의 자율성·창의성에 기반을 둔 개성 있는 도시재생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도시재생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민, 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

〈표 7〉 도시쇠퇴 극복을 위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제1순위)

구 분	산업경제 육 성	문화관광 기반조성	도시의 사회문제 개선	주거여건 개 선	법·제도 지 원	전 체	Chi-Square
시급도시	55.2	10.3	3.4	24.1	6.9	100.0(29)	6.335 (.175)
군급도시	78.9	-	10.5	10.5	-	100.0(19)	
전체	64.6	6.3	6.3	18.8	4.2	100.0(48)	

여야 한다.

셋째, 지역간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광역경제권 체계에서 대도시와 농산어촌을 연결하고 기능을 강화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발굴되어야 한다. 도시간·지역간 경쟁은 폐쇄적 국내경쟁이 아니라 지역간 협력화, 공동화, 규모화를 통해 개방적·국제적 지역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

2. 대응 전략

1)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창조적 도시재생사업 발굴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의 개성을 살린 특성화된 지역발전과 자율을 통한 지역주도발전, 지역간 협력,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도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특색과 미래상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주와 부여, 홍성 등 역사문화자산이 풍부한 지역은 역사문화·디자인을 활용한 창조적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연기, 홍성, 예산, 태안 등에서는 세종시, 도청신도시, 기업도시와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및 구

도심재생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많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자산과 연계한 재래시장 경쟁력 재생사업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개개의 시·군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단기간 내 적용 가능한 창조적 도시재생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2)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은 국가차원에서는 높지만 아직까지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추진체계 구축 및 대응전략은 미흡하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자치단체는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과 등을 설치하고, 자치단체 산하의 공사에 도시재생본부, 도시정비팀 등을 두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단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만이 뉴타운사업단을 설치하고, 경기도시공사에 뉴타운사업처를 설치하여 사업위주로 대처하고 있을 뿐 충청남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조직개편 등 적극적인 대처는 미흡하다.

충청남도에 속한 시·군단위에서는 천안과 아산이 도시정비팀, 도시재개발팀, 원도심개발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이 있을 뿐이다.

중앙정부는 2009년 시행을 목표로 ‘(가칭) 도시재생지원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어 도시재생정책의 구체화 및 사업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재생 관련 재정 지원은 지금과 같이 각 부처 세부사업별 승인 및 소액지원방식에서 ‘포괄적 재정지원’을 통해 자치단체가 세부사업을 직접 기획하도록 하고 있어 부서간 협조는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시·군간 협조도 중요하다.

이에 충청남도과 시·군은 도시재생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만들어질 조직은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성격상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세부사업 중심의 하나의 부서 단위가 아닌 도지사나 부지사, 시장이나 부시장 차원에서의 조직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재생사업의 발굴에 있어서 인접한 도시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충청남도는 이를 위한 조정 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3) 지역간·도시간 협력 강화

흔히 지금의 시대를 도시간·지역간 경쟁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저성장시대, 인구감소시대에는 도시간 경쟁 못지않게 협력·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광역경제권 및 기초생활권 개발 정책 등 지역간 협력·연대를 강조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역량, 협력에 따라 재정 지원은 더욱 뚜렷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에는 도시간 네트워크 협력체계가 보다 강조되고 있어 이와 연계된 도시재생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천안·아산의 연계를 강화하여 광역경제권의 중심도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종시, 도청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의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연기, 홍성·예산, 태안, 아산 등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의 침체, 신도시개발의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협력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V. 결론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도시정책과 도시재생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발표에서 중소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 재생 등을 종합 추진하여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연결하는 자립적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시범사업 등 실천계획도 제시될 것이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지역발전정책이 중앙주도가 아니라 지방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지방정부 차원의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처가 요구된다.

실제 충남의 도시 중 천안, 아산 등 수도권 효과를 받고 있는 몇몇 중소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는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충남의 지역발전, 도시의 질적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우선 충남 중소도시의 실태와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도시 미래상과 연계된 중소도시재생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밀착형 사업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시·군 및 주민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지역의 자산과 특성을 살린 지역에서부터의 계획 수립과 시책·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이것이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추진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조직구성과 지역 연구원, 대학 등과 협력하면서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생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재생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12.15,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 발표」, 보도자료
2. 관계부처합동, 2008. 12. 15,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3. 충남발전연구원 외, 2008.11, 중소도시재생 정책방향과 추진계획(안)
4. 조기현, 2008.11,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추진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
5. 김용웅, 2008.1,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과제, 국토정보
6.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0·2005, 통계청
7. 주민등록인구, 2005, 통계청
8.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5, 통계청
9.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7.5, 통계청
10. 2005년 한국도시연감, 2006, 행정안전부
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2006 지방재정분석자료
12. http://finance.naver.com/coinfo/1000_list.php(매출액 1000대기업), 2007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총론적으로 살펴본 것으로서, 구체적인 도시별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는 쇠퇴실태와 원인분석, 도시의 자원 및 미래상 분석 등을 통해 보다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밝혀둔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 부여전통시장을 중심으로 -

임준홍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경태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재래시장(이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7년까지 1조1,8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충청남도는 2007년까지 4년간 412억원을 투입하였다.¹⁾

이러한 시설현대화사업 중심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성과 시장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을 지역문화와 시장특성을 살린 문화적 환경으로 조성하고, 문화·관광콘텐츠의 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8년 6월 13일 4곳의 ‘문화

관광형 시범시장’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점차 확대하여 2012년까지 50곳을 개발할 계획이다.²⁾

이에 본 연구는 ‘문화관광형 시범시장’으로 선정된 부여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향후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성공을 위한 실천 과제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을 위해 콘텐츠 개발, 물리적 정비, 상인역량 강화, 운영 방안 측면으로 구분하여 상인과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향후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여야 하는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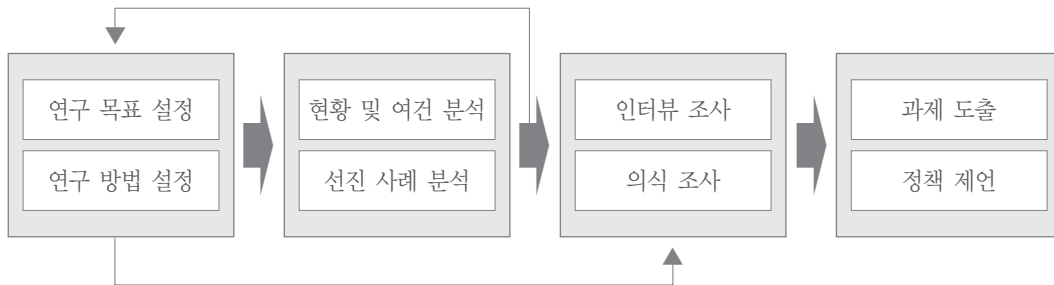
1) 충청남도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2004년 23곳(159억원), 2005년 19곳(148억원), 2006년 12곳(64억원), 2007년 5곳(41억원) 등 59곳에 대해 주차장과 화장실 등 고객 편의시설 개선과 전통시장별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 구축, 전자 상거래 추진, 전화주문 콜 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

2) 2008.6.13일자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4곳 선정” 참조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여전통시장의 내부 현황 및 주변관광자원 분석과

선진 사례조사, 문화관광형 시장육성방향에 대해 공무원과 상인의 인터뷰조사 및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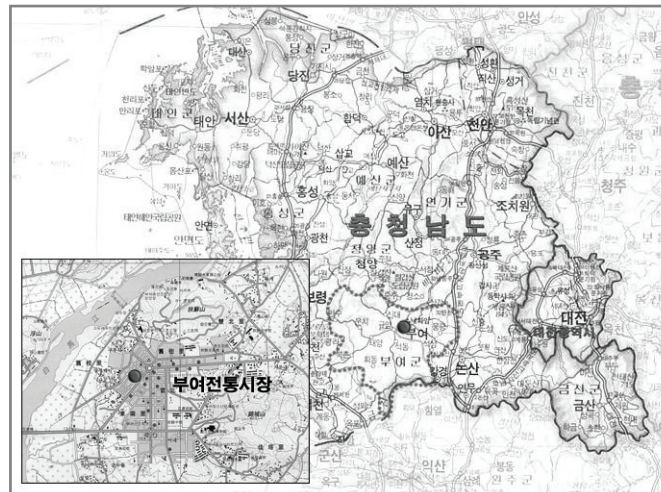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진행과정

현황 및 주변관광자원 분석은 부여군에서 발간하는 통계자료와 내부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선진 사례조사는 문헌, 인터넷,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부여전통시장의 육성방향에 대한 의식조사는 부여군청, 상인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설문조사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부여전통시장과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여군청 공무원과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2008년 9월 1일부터 5일까지 상인 59명(상인회 회원 93명)과 공무원 84명(전체 공무원 524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한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부여전통시장 내부(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420번지 일원)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위치는 〈그림 2〉과 같다.



〈그림 2〉 연구의 대상지역

II.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의 역할과 선정개요

1.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의 개념과 역할

중소기업청(2000)은 전통시장을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고유의 전통적인 시장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근대적 유통시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인 1980년 이전에 개설된 시장이거나 시설이 노후되어 재개발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시장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서민들의 소비경제생활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획일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서 옛 모습을 보존하고, 지역 상인들의 생계수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 존재의 필

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은 현대 유통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통시장의 생존전략으로서 대형마트와 차별된 다양한 볼거리(옛모습, 새로운 모습 등) 제공과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의 개념을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을 정비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둔 시장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이 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관광

매력성이 있는 관광소재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의 멋과 매력을 발산하는 역사문화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 하며, 관광객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정서적 체험 공간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2.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의 선정개요

‘문화관광형 시범시장’으로 선정된 4곳의 시장은 지역특산물과 관광자원의 상품성이 우수하여 개발시 사업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 곳이다.

먼저, 강릉 주문진시장은 종합시장, 수산시장 등 4개 시장이 밀집한 영동지방 최대 상권

으로, 주문진어항, 해수욕장, 오죽헌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오징어, 황태 등의 특산물이 있다. 제주 동문시장 활성화구역은 한라산, 제주항, 탐동공원과 같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전복·한라봉 등 특산물이 풍부한 곳이다. 인천 송현시장은 대도시 주택단지에 위치하고 50여년의 역사를 가진 근린형 시장으로 도심형 문화시장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본 연구대상지역인 부여시장은 부여 왕릉원, 낙화암 등 백제 왕도로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풍부하고³⁾, 충청도에서 추진하는 “백제문화제”,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⁴⁾”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선정되었다.

〈표 1〉 문화관광형 시범시장의 선정 현황

지역	시장명	점포수	상인수	시장특성
강 원	주문진시 장	116	237	· 주문진어항, 해수욕장, 오죽헌 등 관광자원 풍부 · 오징어, 황태 등 특산물
제 주	동문시장 활성화구역	1,325	3,276	· 한라산, 제주항, 탐동공원, 산지천, 삼성혈 등 관광자원 풍부 · 전복·한라봉·자연산 활어 등 지역특산물 풍부
인 천	송현시장	141	260	· 풍부한 상권 배후지 인구(75천명)와 50여년의 긴 역사 · 수도산 박물관, 배다리 전통공예상가 등 문화전통 상권과 인접
충 남	부여시장	127	208	· 부여왕릉원, 정림사지 5층석탑, 낙화암 등 풍부한 문화유산 · 백제문화권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지자체 의지 매우 높음

자료 : 2008.6.13,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4곳 선정” 참조 재작성

3) 부여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47건, 국가등록문화재 2건, 도지정문화재 54건, 문화재자료 40건 등 총 143건의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이 있다.(향토유적은 제외)

4) 백제역사재현단지는 1994년부터 충청남도와 문화관광부가 부소산과 낙화암 맞은편 백마강변에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시설이며, 총 100만평 규모로 역사재현촌·백제역사민속박물관·연구교육촌으로 나뉘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역사재현촌은 개국촌·왕궁촌·전통민속촌·군사통신촌·장제묘지촌·산업교역촌·풍속종교촌의 7개 주제를 바탕으로 백제시대를 재현하고 있다.

Ⅲ. 부여전통시장의 현황 및 여건 분석

1. 현황분석

부여전통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콘텐츠 측면, 물리적 측면, 운영과 관련된 상인 역량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콘텐츠 측면에서는 부여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점포가 없고, 이와 관련된 축제도 없으며,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된 시책도 없다.

둘째, 물리적 측면에서는 1916년 개설 후 1969년 현 위치로 이전한 후 1970년대 전후까지는 위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보, 문화, 삶의 교류 장소로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지금은 건축물의 노후화, 가로환경 열악, 편의

시설 부족, 접근성 열악, 도로점유에 따른 불편 등으로 소비자가 외면하여 침체·쇠퇴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축물들은 노후화되고, 스프레트 지붕 등의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 판넬을 덮어 놓은 상태이고, 건축물 벽이 낡고, 전선이 외부로 노출되어 화재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 내에는 모두 124개 점포가 있으며, 이 중 이용되지 않는 곳이 47개소이며, 주택도 12곳이나 있다. 영업하고 있는 점포 역시 장날이 아닌 평일에도 장사하는 점포는 27곳 뿐이며, 가정집으로 활용하면서 장날에만 장사하는 점포가 10곳이며, 나머지 많은 점포들이 주택 및 창고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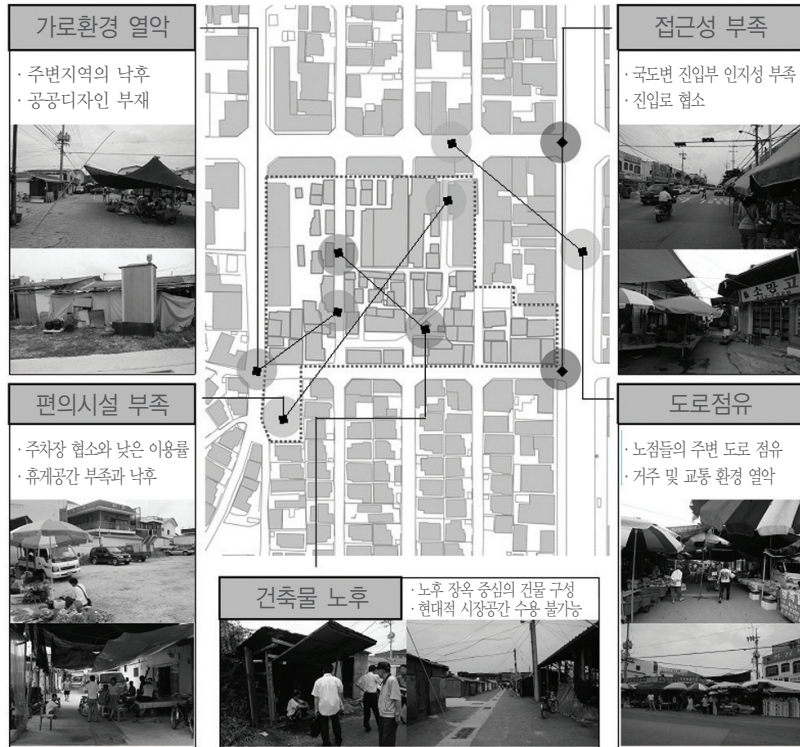
편의시설로는 공용화장실 1개소가 있으나 광장 등 휴식공간은 없으며, 주차장 위치가

〈표 2〉 부여전통시장 개요

지 역	시 장 특 성		
시장구분	정기시장(5일, 10일), 인정시장, 공설시장		
소재지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420번지 외 5필지		
대표자	부여군수	관리자	부여5일장 시장상인회
개설일자	1916.3.15	건축일자	1969년
대지면적	9,693㎡	건축연면적	2,075㎡
부대시설	화장실1, 소화전8	주요 취급품목	생선, 채소, 잡화, 의류, 음식

〈표 3〉 부여전통시장 공간이용 현황

구 분		내 용
시장구분	일반장옥	50호
	상주장옥	27호
	소계	77호
점 포	상설점포	27개
	정기(장날)점포	10개
	주택	12개
	창고 및 기타 이용	47개
	공점포(휴폐업)	28개
	소계	124개
노 점	점포당 면적	2~20평
	노점수	192개
	점유면적	4,623㎡
이용자수	장날	약 1만명
	평일	약 3천명



〈그림 3〉 부여전통시장 현황

시장진입구와 450m정도 떨어져 있어 불편을 느낀 많은 이용객들이 노상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 특히, 5일장에는 부여전통시장 내 부보다는 주변 도로변을 따라 노점(192개 노점)이 형성되어 있어 시장으로의 차량진입 불가능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셋째, 상인역량측면에서 살펴보면 시장상인들로 구성된 상인회(등록일 2007.5.17(부여군 제1호), 총회원 93명)가 구성되어 있지만 고령화로 인해 운영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

특히, 시장 상인 107명 중 60세 이상(1948년생 이상)이 5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설의 노후화 못지않게 상인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부여군청 소유의 시장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영업하는 점포는 27개 점포 밖에 되지 않아 상권약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관광 여건분석

실제 부여에는 연간 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216점의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 6~7월에는 ‘궁남지 연꽃 축제’에 30만 명, 9~10월 백제문화제에 100만 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찾고 있다.

특히, 부여전통시장 주변에는 다음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궁남지, 부소산 낙화암, 국립박물관, 정림사지5층석탑, 굿뜨래공원, 백제역사재현단지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산이 분포되어 있다. 백제역사재현단지내에 관광자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3천억 규모의 대기업 민자유치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되고 있어 관광객이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4〉 부여전통시장 주변 관광지 현황

Ⅳ. 선진 사례 분석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국내 사례와 우리와 가장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일본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장흥토요시장, 함평전통시장, 일본의

분고다카다시의 ‘쇼와의 마을’ 등에서는 역사문화·관광 자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 장흥토요시장은 1970·80년대의 모습으로, 쇼와의 마을은 1950년대의 모습으로 재현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둘째, 전통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각종 캐릭터 개발과 가이드북 제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셋째, 지역축제와 지역민(예술인 등)과 연계를 통해 시장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주반딧불장터와 벤

넌토오리상점가 등에서는 지역축제와 지역민과 연계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성공하였다.

넷째, 개별점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운영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표 4〉 사례 전통시장의 주요 특징

시 장 명	주 요 특 선	시 장 명	주 요 특 선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쉼터, 유아놀이방 등 편의시설 확보 - 70~80년대 모습 강조 - 토요시장을 개설로 볼거리 제공, 캐릭터 개발 	분고다카다시 쇼와의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점가가 가장 변명한 쇼와 30년대 재현 - 쇼와의 마을을 지역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 - 연 25만명의 관광객(시인구 2.6만명)
함평 전통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적 막구조로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 수상 - 60~70년대의 모습 강조 	마에바시시 벤넌토오리 상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예술인과 연계한 각종 이벤트 개최(벼룩시장 등) - 독자 상품 개발 및 가이드북 제작
무주 반딧불장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딧불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 개최 - 무주 특산품과 전통수공예품 상설 전시 	사카이시 프레스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주도하의 공동법인 설립으로 현대식 슈퍼마켓 개장 - 이용자 행태를 고려한 쇼핑 동선 계획으로 재미 부여
대전 중앙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인 공동경영을 통한 점포 경쟁력 강화(중앙그릇도매상가, 태전마트) - 독자적 브랜드 개발 	오사카시 센바야시 공설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출자로 커뮤니티시설을 확보한 쇼핑공간 정비 - 커뮤니티 및 문화발신 거점 공간으로 정비
임실 오수민속장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렴한 임대료(월 9만원)에도 불구하고 미입대 - 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디자인 	나가하마시 나가하마 상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21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시인구 6.2만명) - 전통적 건물을 통한 아름다운 거리만들기 사업 추진 - 지역자본을 활용한 (주)구로가베 설립·운영
			
장흥토요시장	함평전통시장	쇼와의 마을	벤넌토오리상점가

V. 전통시장 육성 방향에 대한 인식 분석

1. 조사대상자 속성

조사대상자는 시장상인 58명(2008년 6월 현재 총124개 점포, 노점 제외), 공무원 84명(2007.12월 현재 총 524명)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이중 남성이 53.8%, 여성이 46.2%이고,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6.1%, 60대 이상 및 20대가 21.1%이다.

이들의 거주지는 시장과 가까운 부여읍 거주자가 73.4%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소비자의 한 사람인 공무원들은 5일 장날에 가장 많이 찾아 생선, 야채, 채소, 과일 등 먹을거리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설문대상자 속성

구분		응답자수(%)	구분		응답자수(%)
직업	상인	59 (41.3)	성별	남성	77 (5.8)
	공무원	84 (58.7)		여성	66 (46.2)
주로 판매하는 품목(상인)	음식 서비스	22 (37.9)	주로 구매하는 품목(공무원)	음식점 이용	3 (3.7)
	생선, 야채, 등 먹을거리 판매	13 (22.4)		생선, 야채, 등 먹을거리 구매	73 (90.1)
	의류, 포목 등 잡화 판매	11 (19.0)		의류, 포목 등 잡화 구매	0 (0.0)
	기타	12 (20.7)		기타	5 (6.2)
주 영업일(상인)	평일	30 (53.6)	주 이용일(공무원)	평일	9 (10.7)
	5일장	26 (46.4)		5일장	30 (35.7)
	주말	0 (0.0)		주말	23 (27.4)
	거의 영업하지 않음	0 (0.0)		거의 사용하지 않음	22 (26.2)

2. 분야별 육성 방향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요소인 “콘텐츠 분야”와 “물리적 정비 분야”, “교육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분야 중에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주차장 등 물리적 시설 정비 분야(66.9%)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어 부여시장만의 콘텐츠, 축제(28.2%)라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상인교육 분야(4.9%)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6〉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구 분	도입 콘텐츠 및 이벤트 분야	물리적 시설 정비 분야	상인교육분야	전체
상인수(%)	8(13.8)	50(86.2)	0(0.0)	58(100.0)
공무원수(%)	32(38.1)	45(53.6)	7(8.3)	84(100.0)
전체	40(28.2)	95(66.9)	7(4.9)	142(100.0)

* Chi-Square = 17.489(.000)

1) 도입 콘텐츠 및 이벤트 분야

도입할 콘텐츠 및 이벤트의 특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즐기

면서 관람하는 콘텐츠와 시장과 관련된 이벤트, 문화 행사의 개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색 있는 공예품 등 관광상품 개발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7〉 콘텐츠 및 이벤트 특성에 대한 중요도

(5점 만점)

구 분	상인	공무원	전체평균	F-값	유의수준
지역의 문화를 느끼는 것이 중요	3.15	3.36	3.27	3.057	0.083
각종 이벤트와 문화행사 개최가 중요	3.21	2.89	3.02	5.290	0.023
풍부하고 즐거운 문화 체험 제공이 중요	3.05	3.06	3.06	0.002	0.962
지역의 역사를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	2.84	2.96	2.91	0.864	0.354
즐기면서 관람할 수 있는 것이 중요	3.22	3.36	3.30	1.593	0.209
특색있는 공예품 등 관광상품이 중요	3.12	2.83	2.95	4.969	0.027
전문적이고 교육적인 전시가 중요	2.81	2.41	2.57	6.404	0.012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기능이 중요	2.90	2.57	2.71	4.836	0.029

콘텐츠 및 이벤트 개발 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소재로는 굿뜨레 등 지역농·특산물이 가장 적합하고, 이어 지역의 공예품 및 우수

한 백제 유물·유적 문화를 소재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다.

〈표 8〉 콘텐츠 이벤트 소재에 대한 적합도

(5점 만점)

구 분	상인	공무원	전체평균	F-값	유의수준
지역의 농·특산물	3.44	3.61	3.54	2.788	0.097
지역의 공예품	3.07	2.94	2.99	1.037	0.310
우수한 백제 유물·유적 문화	3.02	2.90	2.95	0.514	0.474
백제 역사 인물(왕, 장군, 충신, 학자 등)	2.65	2.63	2.64	0.008	0.930
역사적 사건(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등)	2.77	2.70	2.72	0.182	0.670
지역의 설화와 전설의 신비감	2.77	2.73	2.75	0.034	0.853

2) 물리적 시설 정비분야

물리적 시설 정비분야를 시장기능과 관련된 분야, 문화관광기능 관련 시설, 시장을 찾는

이용자 편의시설 분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시장 상인과 공무원 모두 이용자 편의시설, 관광객 유치시설, 시장기능 강화시설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9〉 물리적 시설 정비 분야 중 가장 중요한 분야

구 분	시장기능 강화 시설	관광객 유치 시설	이용자 편의시설	전 체
상인수(%)	11(20.0)	20(36.4)	24(43.6)	55(100.0)
공무원수(%)	15(17.9)	31(36.9)	38(45.2)	84(100.0)
전체	26(18.7)	51(36.7)	62(44.6)	139(100.0)

* Chi-Square = 0.103(950)

시장기능 강화시설 분야에서는 시장상인과 공무원 모두 전통음식골목(먹거리타운)의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10〉 도입시설에 대한 필요도 (시장기능)

(5점 만점)

구 분	상인	공무원	전체평균	F-값	유의수준
상설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정도)	2.98	2.98	2.98	0.001	0.978
전통음식 골목 (먹거리 타운)	3.52	3.57	3.55	0.272	0.603
한복, 의류 골목	2.73	2.66	2.69	0.233	0.630
노점상을 수용할 수 있는 광장	2.88	2.71	2.78	0.941	0.334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문화관광 관련 시설 분야에서는 부여의 대표적인 상품이면서 이미 전국적 지명도를 확보하고 있는 굿뜨레 특산물 판매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노점상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광장에 대한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 도입시설에 대한 필요도 (관광기능)

(5점 만점)

구 분	상인	공무원	전체평균	F-값	유의수준
굿뜨레 특산물 판매장	3.38	3.60	3.51	5.778	0.018
역사문화전통체험장 (공예체험 등)	2.89	2.95	2.93	0.219	0.641
야외공연장 (광장, 5일장 노점 수용)	3.04	2.98	3.00	0.159	0.691
부여관광 정보센터 (시장, 관광정보)	2.86	2.93	2.90	0.270	0.604

한편,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편의시설 관련 분야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어 만남의 광장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통시장 내 상

인과 주민을 위한 교육장 설치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비해 상인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그 필요도는 보통(3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2〉 도입시설에 대한 필요도 (편의기능)

(5점 만점)

구 분	상인	공무원	전체평균	F-값	유의수준
고객지원센터(고객센터, 고객센터 등)	2.91	3.10	3.02	1.841	0.177
상인·주민 교육장	2.78	2.39	2.54	6.479	0.012
보건소, 병원, 동사무소 등 편의시설	2.30	2.57	2.46	1.875	0.173
어린이, 노인 관련 시설(놀이방 등)	2.82	2.72	2.76	0.339	0.562
만남의 광장 및 휴게실	3.09	3.24	3.18	1.556	0.214
주차장	3.61	3.73	3.68	1.470	0.227
시장 상인들을 위한 주택	2.25	1.65	1.88	6.822	0.010

한편, 현재 업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당에 대해 어떤 형태의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개별 소형 음식점과 대규모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음식점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었다

3) 상인교육분야

상인 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인의 절반이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으며, 도움이 된다 까지 포함하면 91.5%의 교육 참여자가 도움이 되었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조사응답자 모두가 상인 교육을 처음 받는 사람들이어서 초기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반해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13〉 상인교육에 대한 효과

구분	많은 도움이 됨	도움이 됨	보통	도움이 않됨	전혀 도움이 안됨	전체
상인수(%)	28(59.6)	15(31.9)	3(6.4)	1(2.1)	0(0.0)	47(100.0)
공무원수(%)	17(21.8)	31(39.7)	26(33.3)	3(3.8)	1(1.3)	78(100.0)
전체	45(36.0)	46(36.8)	29(23.2)	4(3.2)	1(0.8)	125(100.0)

* Chi-Square = 22.171(0.000)

상인에게 꼭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서비스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상품판매 및 점포관리에 대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교육과 침체한 전통시장의 특성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14〉 상인에게 필요한 교육

(5점 만점)

구 분	상인	공무원	전체평균	F-값	유의수준
상인의 서비스 능력을 높이는 교육	3.56	3.54	3.55	0.031	0.860
상인회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2.93	2.63	2.75	4.598	0.034
유통산업, 재래시장 특성에 대한 교육	3.33	3.03	3.15	5.653	0.019
상품판매 및 점포관리에 대한 교육	3.44	3.23	3.31	2.929	0.089
국내외 유명 재래시장 답사를 통한 교육	3.09	2.60	2.80	11.386	0.001
인터넷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3.06	2.96	3.00	0.442	0.507
공동구매, 상설마트 운영에 대한 교육	3.00	3.09	3.05	0.360	0.549

3. 운영방향

부여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로는 상인과 공무원 모

두가 상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외에 상인은 자치단체의 역할이, 공무원은 주민과 군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15〉 부여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

구분	상인	자치단체	주민·군민	전문가	전체
상인수(%)	40(69.0)	9(15.5)	5(8.6)	4(6.9)	58(100.0)
공무원수(%)	47(56.0)	4(4.8)	33(39.3)	0(0.0)	84(100.0)
전체	87(61.3)	13(9.2)	38(26.8)	4(2.8)	142(100.0)

* Chi-Square = 23.133(.000)

시장 및 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설마트 구성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상인들은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16〉 상인들이 공동운영하는 상설마트를 만드는 것에 대한 생각

구분	매우 좋은 방법	좋은 방법	고려해볼 만함	좋은 방법이 아님	전체
상인수(%)	25(46.3)	29(53.7)	0(0.0)	0(0.0)	54(100.0)
공무원수(%)	11(13.1)	45(53.6)	24(28.6)	4(4.8)	84(100.0)
전체	36(26.1)	74(53.6)	24(17.4)	4(2.9)	138(100.0)

* Chi-Square = 31.889(.000)

그리고 상인들이 함께 만든 상설마트의 운영에 있어 전문 경영가가 위탁하는 방식의 운

영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표 17〉 상인들이 공동운영하는 상설마트에 전문 경영자 위탁운영에 대한 생각

구분	매우 좋은 방법	좋은 방법	고려해볼 만함	좋은 방법이 아님	전체
상인수(%)	6(10.5)	18(31.6)	27(47.4)	6(10.5)	57(100.0)
공무원수(%)	9(10.8)	23(27.7)	40(48.2)	11(13.3)	83(100.0)
전체	15(10.7)	41(29.3)	67(47.9)	17(12.1)	140(100.0)

* Chi-Square = 0.388(.943)

이상의 의식조사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콘텐츠 개발 분야, 물리적 시설정비 분야, 상인교육 분야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물리적 시설정비 분야로 상인의 경우 응답자의 86.2%가 답하고 있다. 콘텐츠 개발의 소재로는 지역의 농·특산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물리적 시설정비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편의시설 유치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상인교육 분야에서는 상인의 서비스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필요도에 대해서는 상인과 공무원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시장 육성을 위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주체에 대해서 상인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상인들은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공무원은 자치단체의 역할보다 주민·군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

한편, 설문조사 분석결과와 전문가 인터뷰 조사 결과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 분석 결과 상인과 공무원 모두 물리적 시설정비 분야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문가 인터뷰조사에서는 콘텐츠 개발 부분을 가장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상인은 현재의 부여전통시장이 시장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강하게 의식하고 지적한 것으로 생각되며,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방향, 장기적인 방향에서 접근한 것으로 생각된다.

VI. 정책 과제 및 제언

1. 정책 과제

부여전통시장은 부여라는 관광도시에 있을 뿐 현재 전통시장에서 부여의 이미지를 느낄

수 없으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요소는 부족하다. 이에, 부여전통시장은 백제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상품을 파는 시장’에서 ‘이미지를 파는 시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관광객 못지않게 주민이 찾을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 특히 부여전통시장은 중심시가지에 위치하고, 주변은 주거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상업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근린공원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그 토대 위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둘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부여전통시장 만의 일관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부여만의 이미지를 창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볼거리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을 돌릴 수 있다.

셋째, 성공적인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상인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부여전통시장 상인의 절반이상이 고령화되어 있으며, 오랜 침체로 인해 의욕도 약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인역량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이러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에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기존의 행정-상인-소비자의 일방적인 체계로는 상인, 주민, 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2. 정책 제언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꾸준한 정책적 관심과 많은 재원 투자를 하였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명박 정부는 전통시장에 “역사문화”, “관광”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그 첫 번째 대상지역이 부여전통시장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여전통시장의 성공 여부는 향후 전통시장 육성 방향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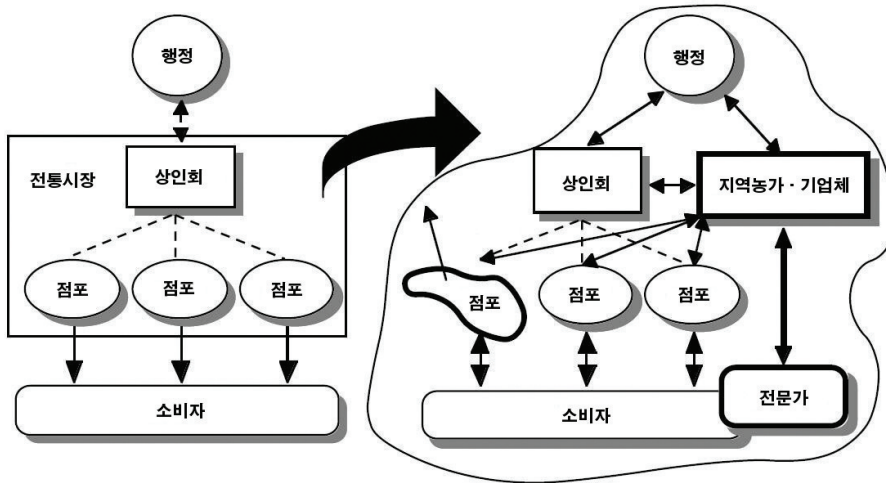
에서 앞에서 제시된 과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시장의 원기능인 상업기능은 시장의 성공을 위해 가장 기본적 요소이며, 그 위에 부여만의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이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할 스토리텔링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현가능한 콘텐츠 개발이다. 부여시장의 스토리텔링은 의식조사를 참고하여 부여시장 만의 소재로 끌어 들여야 할 것이다. 그 예로 마 파는 아이 “서동”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에 기초하여 시장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물리적 정비비용 못지않게 콘텐츠 개발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왜냐하면 콘텐츠 개발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 관광객은 좋은 콘텐츠라고 할지라도 쉽게 식상해 버리기 때문에 꾸준한 개발이 중요하다.

둘째, 지속적인 상인교육이 성공의 열쇠이다. 부여전통시장 상인의 절반이상이 60세 이

상의 고령자이다. 이들 고령자들이 전통시장 내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공동운영 및 외부 전문인 경영 등을 통해 점포의 규모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동운영 등으로 여력이 있는 상인들과 상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의 관리, 캐리어 운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의 참여 및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화된 지금의 상인들만으로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민·지역업체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역량 창출이 필요하다. 콘텐츠 개발 및 시장 상품 개발 과정에 있어 부여전통시장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젊고 의욕 있는 젊은 사업자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지금 부여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민·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부여전통시장의 성공여부는 독창적인 판매 상품에 달려 있으므로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일정한 예산(예, 2년 동안 2억)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5〉 함께하는 추진체계 구축방안

넷째, 부여전통시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민·지역업체가 함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민이 찾지 않는 전통시장은 관광객도 찾지 않는다. 따라서 부여전통시장은 평일에는 근린공원과 같은 쇼핑여가공간으로, 5일장에는 인근 상인과 인근 주민이 모이는 전통시장의 모습으로, 토요일에는 관광객의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관광시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은 부여만의 특색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 방법은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지역업체가 애착을 갖고 상품을 책임 공급·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과 전문가는 이벤트 및

상품개발을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의 주도가 아니라 행정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상인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인교육과 더불어 전통시장의 문화공간, 행사공연장화와 연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전문조직(전통시장 운영회사)의 설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시장공간의 정비에 있어서는 공공디자인·현상설계를 통해 현대적으로 재해

석·재디자인하여 시장 자체가 상품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부여전통시장의 스토리텔링과 컨셉이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공무원과 상인의 의식차이가 있으며, 인터뷰조사와 설문조사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문화관광형 시장육성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과제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전문가 인터뷰조사에서는 시장육성을

위해 콘텐츠 부분을 가장 강조하지만 의식조사에서는 물리적 시설정비 분야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 차이를 이해하면서, 창조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이는 계획에서부터 조성, 육성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PM제도(Project Manager)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PM제도는 이미 도시재생사업이나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에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단계에서부터 도입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참고문헌

1. 김용욱, 2005, 강원도 폐광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사북시장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유통정보학회지, Vol.8 No.1, 한국유통정보학회
2. 김중식, 2003,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의 효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산업경제연구, Vol.16, No.5, 한국산업경제학회
3. 김형길, 2005, 제주지역 소비자의 유통업체 이용실태 분석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탐라문화, Vol.26 No.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4. 노승희외 2인, 2006, 재래시장 상인의 불황극복과 경영혁신을 위한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Vol.28 No.4, 한국중소기업학회
5. 박봉두외 1인, 2007, 재래시장 경쟁력 구성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유통연구, Vol.12 No.5, 한국유통학회
6. 박석희, 2000, 관광루트에 있는 재래시장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서울 - 양평 - 홍천 - 인제 루트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Vol.24 No.1, 한국관광학회
7. 정민외 1인, 2005, 재래시장의 쇼핑관광매력성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Vol.7 No.2, 한국문화관광학회
8. 중소기업청, 2000,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9. 지진호외 1인, 2000, 재래시장의 문화관광 자원 활용방안, 여행학연구, Vol.12 No.0, 한국여행학회
10. 오동욱외 1인, 2007, 재래시장의 서비스 품질과 소비자 만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Vol.29 No.1, 한국중소기업학회
11. 이재하, 2007,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평가와 대안 모색:경상북도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10 No.3, 한국경제지리학회
12. 이민우, 2005,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경영, 마케팅 측면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Vol.18 No.2, 한국산업경제학회
13. 이성호외 2인, 2003,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연구보, Vol.15 No.0,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14. 이장희, 2005, 재래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충북지역상권분석, 산업과 경영, Vol.18 No.1,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5. 최주영, 2006, 일반재래시장 재정비를 위한 시장의 유형별 세부특성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Vol.31 No.1,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16. 허정옥, 2004, 지방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관한 사례분석, 마케팅관리연구, Vol.9 No.2, 한국마케팅관리학회
17. 형성은, 2007,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미지요소 추출 방법에 관한 연구, 감성과학, Vol.10 No.3, 한국감성과학회
18. 홍인욱, 2002, 재래시장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도시와 빈곤, Vol.54 No.0, 한국도시연구소, 산업경제연구, Vol.14 No.6, 한국산업경제학회

역사·문화 유물을 관광자원화한 도시, 베네치아

윤정미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I. 머리말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성공적인 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역사·문화적 유산을 보전한 관광산업 활성화, 자연환경보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 지역특성을 고려한 이미지 차별화, 민관 협력 실천 모형, 지역 연고 기업의 적극 참여지원, 구체적인 도시성장전략 수립, 관련부서의 통합적 운영체계 및 인재육성 사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본 해외출장의 목적은 선진외국의 우수제도 및 정책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지역개발 성공사례를 통해 지역개발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9박 11일의 일정으로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을 다녀왔으며, 그 중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보전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성공한 이탈리아 베네치아 지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연수자 단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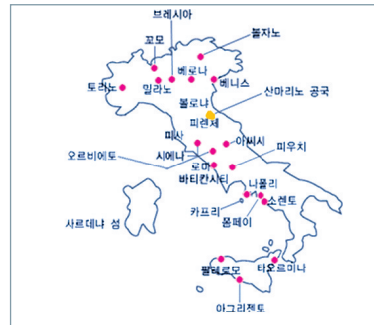
II. 이탈리아 베네치아

1. 일반 현황

이탈리아는 인구 5,814만 명, 면적 301,230km²으로, 북쪽으로 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 등과 이웃하고, 동쪽으로 아드리아 해를 사이에 두고 발칸 반도와 지중해를 사이에 두

고 북아프리카와 마주 보고 있다. 산지가 많은 편이어서 700m 이상의 산지가 35%를 차지하며 구릉지대가 42%, 나머지 23% 정도가 평지이다.

이탈리아에서 역사·문화적 유산을 보전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한 베네치아는 베네토주(州)의 주도(州都)이자, 베네치아현(縣)의 주도(主都)이며, 2000년 기준으로 인구는 27만 5,368명이 살고 있다. 아드리아 바다의 인공섬으로 석호(潟湖:라군)¹⁾위에 흩어져 있는 118개의 섬들과 약 400여 개 다리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다.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섬과 섬 사이의 수로가 중요한 교통로가 되어 독특한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다. 해상무역의 본거지로 성장하여 7세기 말 무역의 중심지로 알려졌고, 10세기 말 동부 지중해 지역과의 무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려 이탈리아에서 가장 부강한 도시로 성장하였다. 19세기 후반부터 이탈리아 경제의 중심인 항구도시로 발전하였다. 이탈리아의 로마, 피렌체와 더불어 중요한 관광지이고, 세계 3대 비엔날레, 국제영화제 등 문화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그림2〉 이탈리아 지도



〈그림3〉 베니스 지도

2. 도시 특성

1) 유기적인 도시 베네치아

베네치아의 도시성장을 살펴보면 인위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도시가 아니라 바다와 운하라는 자연환경과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성장과 변화를 반복한 도시다. 이에 특이한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미로와 같은 유기적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계획된 도시가 연출하는 직선적인 조망



〈그림 4〉 유기적 도시 베네치아

1) 사주(砂洲)로 바다와 격리된 호소(湖沼). 해류·조류·하천 등의 작용으로 운반된 토사가 바다의 일부를 폐색함으로써 바다에서 호소가 떨어져 나오거나, 해안 가까이에서 바람이 모래를 운반하여 호소와 바다를 분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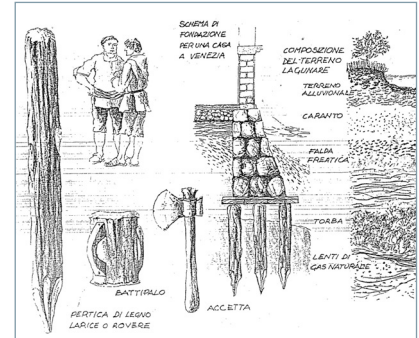
을 발견할 수 없으며, 건축물들의 관계나 공공장소들의 질서 있는 관계도 볼 수 없다. 도로 패턴도 불규칙적이고, 도시조직 또한 복잡적이다.

2) 인공섬 건설을 통한 성공적인 도시개발 사례

물 위에 있는 운하의 도시이기에 시가지 중심에 S자형 대운하가 관통하고 있다. 베네치아는 석호를 매립하여 인공지반을 만들고 인공섬을 건설하였기에 혈관처럼 자리 잡은 운하는 교통용도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힘에 순응하기 위해 지혜롭게 고안된 물을 통과시키기 위한 생태적 장치였다. 만약 베네치아가 운하에 의존하지 않고 전체를 매립했다면 이미 물에 잠기는 도시가 되었을 것이다.

3)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는 관광도시로 성공한 도시

면적이 한정되어 있어 생활에 편리한 환경이 될 수 없었으나, 베네치아가 성공한 이유는 독창적인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방문객들은 도시의 독특한 환경에 강한 인상을 받는 동시에 강한 장소성에 매료되고 있다. 수로를 통한 수상택시(본토와 베니스)와 곤돌라(베니스 내부)의 교통수단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5〉 인공지반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



〈그림 6〉 곤돌라와 수중택시

4) 공공공간의 확장으로 매력적인 공간 창출

베네치아는 아름다운 매력적인 도시일 뿐 아니라 지혜롭게 건설된 도시이기도 하다. 토지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다른 도시보다 광장이 많으며, 엄청나게 밀도가 높지만 수로로 인해 공간이 개방되어 답답하지 않다.



〈그림 7〉 광장 및 수로

5) 기능과 조닝(zoning)등 근대 계획수법 배제

베네치아가 매력적인 도시라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기능과 조닝(zoning) 등 근대 계획수법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베네치아의 각 지구에는 주거·생산·소비·여가활동 등 인간생활의 여러 가지 양상이 섞여서 자리하고 있으므로, 근대도시에서의 기능적 분화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도시 형성의 초기 단계부터 지리적으로 분리된 작은 섬들에 교구(敎區) 중심의 자립적 커뮤니티를 성립했기 때문에, 이곳에는 주거와 생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동시에 마련되었다.²⁾

6)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도시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성공한 요인은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노력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들 수 있다. 상하수도 정비 등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부분적 도시 이미지 실추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평균 400년이 넘는 건물의 역사성과 고유성, 문화가치의 우수성을 보존하는 노력이 뛰어난 지역이다. 아래 사진과 같이 건물을 보수할 경우 실 사진을 촬영하여 파손시 참조하는 건물 보존에 노력하고 있으며, 거의 매일 건물보수를 계획적 관리하에 실시하며, 노후화된 건물의 보수시 예술작품을 다루는 듯 건물 보존에 노력하고 있다.

2) 손세관, 베네치아-동서가 공존하는 바다의 도시, 열화당, p.41



〈그림 8〉 사진촬영을 하여 건물 보수시 참조

7) 성공적인 지역 축제의 장 베네치아

베네치아의 축제는 지역 관광 상품을 국내 및 해외에 프로모션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모베네치아사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 회사는 베네치아관광진흥청의 활동과 협력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부문별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관광 프로모션 행사에 참여하고 컨소시엄에 소속된 회사들에 대한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상공회의소, 관광진흥청, 베네치아 시, 공적·사적 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성공적인 축제³⁾를 위해 베네치아 시 당국은 관광협회와 같이 식당 및 카페에 안내 책자를 발행하고, 숙박업소 협회는 축제기간동안의 행사 일정 및 지도를 담은 'Guest in Venice'를 발행하여 배포한다. 베네치아의 성공적인 축제는 특정장소가 아닌 도시전체가 무대이며, 도시민 전체가 주체가 되어 행해지고 있다.⁴⁾

8)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모세 프로젝트(Mose Project)'

베네치아는 본래 석호의 사주(砂洲)였던 곳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반이 약하여, 최근 지반침하와 석호의 오염이 도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평균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이 연중 이백 일 이상 넘쳐, 건물의 1층에는 가구를 거의 두지 않고 생활하는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자원 보존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노력으로 세계 11개 국가에서 50여 개의 민간단체가 구성되어, 현재 100개가 넘는 문화유적과 1,000점이 넘는 예술품을 복원하였다. 그리고 2003년 이탈리아 정부는 8년간 26억 달러(2조 4천억 원 이상)를 투입하는 모세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3) 2002년의 통계에 의하면 11일 동안 약 396,157명이 베네치아를 방문하였다.

4) 류정아외 8인, 유럽의 축제문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pp.220-222

이 계획은 78개의 관문으로 이루어진 이동식 장벽을 이용하여 평상시에는 바닷물에 가라앉아 있다가 바닷물 수위가 1.1미터 이상 올라가면 공중으로 부양되어 바닷물을 막는 계획이다. 이렇게 정부주도로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여 역사자원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현재의 베네치아를 만들었으며, 이제는 베네치아만의 노력이 아닌 이탈리아 정부와 전 세계가 공동으로 역사자원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⁵⁾

Ⅲ. 시사점

역사·문화적 유산을 보전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

베네치아는 기존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보전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400년이 넘는 건물의 문화가치 우수성을 겸비한 지역이며,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문화적 유산보다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다른 도시의 개발 모습에 비해 차별화된 모습이다.

지역적 특수성 고려하여 장소성을 형성

물이라는 독특한 환경적 조건을 이용하여 독창적인 장소성을 형성하였다. 도시계획 수법을 이용한 근대 계획 수법을 배제하고, 특이한 자연환경 속에 유기적으로 광장, 길, 운하 등을 밀접하게 연결하여 공간조직을 형성하여 다채로운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독창적인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강한 장소성에 매료되는 지역이다.

민관의 협력을 통한 실천 모형

과거 불굴의 의지와 합리적인 정신으로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삶의 터로는 불가능했던 지역을 현재의 수상도시로 건설하여, 역사·문화의 관광도시를 형성하였다. 아름다운 공간을 형성하기 위하여 밀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주거영역을 포기하고, 공공의 영역을 과감히 확보하여 지금의 경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이제 베네치아만의 고민이 아닌 전 세계가 베네치아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바뀌었고, 엄청난 비용의 모세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였다.

5) 손세관, 베네치아 -동서가 공존하는 바다의 도시, 열화당, pp.280-281

서천, 새로운 도약과 변화에 도전하다

한상욱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아림국(兒林國), 서천읍성, 서천읍으로의 발전

서천읍이 지역주민의 삶의 터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청동기시대. 현재의 서천읍 남산리, 삼산리 일대에 마을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후에 삼한시대의 마한 54국의 하나인 아림국(兒林國) 이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서천에 대한 명칭은 백제의 설림군(舌林郡), 통일신라의 서림군(西林郡), 고려시대의 서림현(西林縣)과 지서주사(知西州事)에 이어 조선 태종 13년(1413)에 서천(舒川)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서천읍이 지금과 같은 모습살이를 취하게 된 것은 조선초에 새롭게 읍성을 건축하면서 그 기틀을 마련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해안 및 국경지역 그리고 내륙의 주요 도로변 읍들의 읍성 보유비율이 높았다. 이중 특히 왜구의 피해가 컸던 해안지역은 방어시설의 정비에 노력을 기울인 점으로 보아 조선초에 새롭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흔적들은 다음과 같은 “세종실록지리지”¹⁾나 “신증 동국여지승람”²⁾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동여지도”에서는 서천읍성과 고읍, 그리고 영취산과 운은산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아마도 삼한시대 이래 서천은 남산에 있었고, 조선 초 세종에 이르러 조금 더 지형이 완만하고 입지적으로 편리한 지금의 서천읍 자리로 터를 옮긴 것이다.

서천군에는 도시적 면모를 갖춘 모습살이 터가 장항읍과 서천읍 등 2개 읍이 있다. 서천군의 군청소재지는 서천읍이지만, 도시의 확장면에서 보면 서천읍보다는 장항읍이 한발 앞서 발전하

1)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서천군조에 읍석성(邑石城)이 운은산(雲銀山) 아래 있으며 성의 둘레길이가 160보4척이라 기술하고 있다.

2) “신증 동국여지승람”에는 읍성의 둘레길이를 3,525척 높이 10척이라 하여 “세종실록지리지”의 읍석성과는 다른 성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같은 “신증 동국여지승람” 서천의 고적조에 고읍성(古邑城)이 보이는데 영취산 산마루에 있고 돌로 쌓은 성의 둘레길이가 1,545척이며 세종 때에 그 지대가 외지고 막혀있어 지금의 읍터로 옮겼고 그 아래에는 또 고읍의 기지가 있다고 하고 있다.

게 된다. 장항읍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미국 수탈의 현장으로써 1928년 장항항 매립, 1931년 장항선 개통, 1937년 장항항 완성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급속하게 확장한 도시이다. 이에 따라 1938년에는 장항읍으로 승격하게 된다. 1938년에 읍으로 승격된 도시가 현재의 광주광역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당시의 발전 속도를 짐작케 한다.

일제강점기의 서천읍도 장항선의 영향을 받아 현재의 도시 골격을 갖추게 되는 데, 1930년대 시가지의 동쪽 끝에 서천역이 들어서면서 서천역과 현재의 군청사를 잇는 중심가로는 형성되고, 이러한 가로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형성됨으로써 도시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서천읍의 도시공간구조는 읍성과 외곽의 이원적인 구조에서 근대기의 육상교통의 발달에 따른 도시구조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육상교통의 발달은 1980년대의 도시 확장과 90년대의 신시가지 개발로 이어지면서 서천의 시가지가 서쪽으로 확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현재의 서천읍 도시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그림 1〉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서천읍성, 고읍성, 남산과 운산

서천읍의 현황 및 여건

서천군은 충청남도 서남단에 위치하여 있고 동쪽으로는 부여군, 북쪽으로는 보령시, 남쪽으로는 금강에 접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서측은 황해에 임하여 있다.

서천읍의 지형은 전체적으로 북고남저형으로, 서천읍의 북측은 야산으로 형성되어 있고, 동·남·서측은 평탄한 지형의 평야지대로서 야산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서천읍의 총면적은 27.72km²로서 서천군 면적의 7.75%에 해당하며 군내의 읍·면들 중 중간 정도의 크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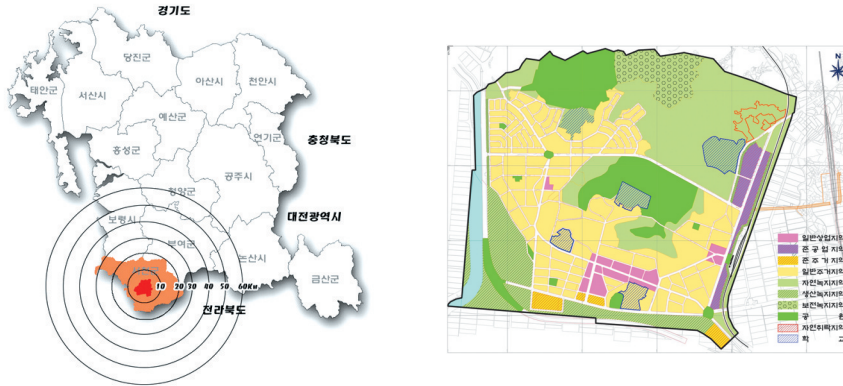
인구는 서천군의 총인구는 60,667명이며 서천읍은 13,396명으로 서천군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서천군의 인구는 매년 2.5~3.5%씩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서천읍의 인구는 0.7%내외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동추이는 서천군 내 주변 면지역으로부터 서천읍으로의 인구 이동에 기인하며, 서천읍 사곡리와 군사리에 지속적으로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어 앞으로도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항읍과의 인구 감소를 비교해보면 장항읍의 인구(13,934명)가 급속하게 줄고 있고, 서천읍의 인구(13,396명) 또한 완만하게나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장항읍보다 서천읍의 인구 감소추세가 완만한 이유는 서천읍은 군내에서 지리적으로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도와 지방도가 서천을 지나고 있어 군내에서 지리적인 중심지로서 교육 및 1차 구매권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인구특성상 서천읍내의 학생수는 인구비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20~40대 거주비가 높기 때문이며, 고등학교 학생비율이 높은 것은 군내의 유일한 남녀공학 인문계 고등학교가 서천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서천읍 전경



〈그림 3〉 서천읍 위치도 및 용도지역도

서천읍을 둘러싼 여건변화들

광역교통망 건설에 따른 서천읍의 생활권 위축 예상

서천군은 충청남도의 시·군보다는 전라북도 군산과의 생활권 교류가 활발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육상교통 특히, 광역교통망의 새로운 건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리적인 공간거리는 그대로지만, 이동속도의 증가에 따른 시간거리가 짧아짐에 따라 생활권의 많은 변화가 생겼고, 이러한 현상은 고차산업으로 갈수록 심각하며, 고차서비스업의 경우 역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천읍에는 장항선 복선 직선화 공사가 진행중이며, 신철도는 장항이 종착역이 아닌 장항, 군산을 거쳐 익산에 연결되는 등 호남선과 직접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2004년 KTX의 개통으로 서울행의 경우 익산역에서 철도교통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고 있으며 (2시간 남짓 소요), 향후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시 1시간 30분 정도로 소요시간이 단축되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천읍 내부적으로는 기존 시가지의 동측에 위치해있던 서천역의 기능은 서천읍 동부로 이전하여 신역사가 건축되면 기존 서천역 주변의 공동화와 신철도역사 주변의 새로운 상권형성이

기존시가지의 침체된 상권을 더욱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역교통망중에 자동차 교통 역시 서천-공주 간 고속도로, 신군장대교의 건설로 인하여 군산으로의 잠식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군산과의 신군장대교의 건설은 서천읍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신군장대교 건설이 제기되었을 당시 서천군은 해안을 매립한 장항국가산업단지의 호안도로(국도77호선)와 군산과의 연결을 주장하였지만, 현재는 내륙산업단지 조성 및 정부대안사업의 추진으로 그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다. 기존의 군장 광역권계획에서는 군산과 장항의 기존 시가지를 연결하기 위하여 금강하구둑과 장항의 서측 송림리에서 군산 해상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계획되어 기존 시가지의 외곽을 연계하였지만, 신군장대교의 건설은 기존 시가지를 직접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도시발전의 중심축의 이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추진될 경우, 국도 4호선을 중심으로 하는 군산과 서천, 장항읍과 서천읍이 연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즉, 신군장대교의 건설은 군산과의 공간거리 뿐만 아니라 시간거리까지 압축시켜 지금보다 더욱 동일 생활권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항국가산업단지 정부대안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발돋움의 전기 마련

서천군은 장항국가산업단지 정부대안사업(이하 '대안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안사업은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그리고 내륙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13년까지 약 4,090천㎡의 부지에 10,3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대안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투자비로 볼 때, 서천군 1년 예산의 3배 남짓하며, 면적으로는 서천군내에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것과 맞먹는 크기가 된다. 주요시설측면에서는 전형적인 쌀농사 위주의 농촌지역에서 생태·연구·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대안사업의 추진은 서천읍 입장에서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를 동시에 마치게 될 수 있다. 즉, 서천군 전체에 있어서 21세기 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복합산업단지의 개발 및 혁신클러스터 구축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정의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도시의 조성에 따른 공간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수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도한 도시용지의 공급은 군내 도시기능의 중복으로 인하여 자립도가 낮고 영세한 특성을 갖는 도시기능의

유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병행하여 추진되지 않을 시에는 서천읍의 도심공동화는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1〉 정부대안사업 개요

구분	계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 자원관	장항국가 산업단지
위치	서천읍으로부터 10km 이내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덕암리, 도삼리, 신포 리, 장선리 일원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화천리, 송림리 일원	서천군 장항읍 및 마서면 일원
면적	4,090천㎡	대지면적 : 998천㎡ 건축연면적 : 43천㎡	대지면적 : 33만㎡ 건축연면적 : 37천㎡	2,762천㎡
사업비	10,300억원	3,400억원	1,213억원	5,687억원
사업 기간	2007-2013	2007-2011	2007-2012	2008-2013
주요시설 및 유치업종	연구, 전시, 산업시설	미래환경연구센터, 실 내생태관, 멸종위기동 식물관, 에코과학교육 센터, 방문자센터	수장·연구동, 교육· 전시동, 배양동, 강당, 세미나실, 게스트하우스	생명과학기술, 청정지 식기술, 수송산업, 지역친화형 산업



〈그림 4〉 서천읍 주변지역 개발사업 위치도



〈그림 5〉 국립생태원 계획(안)



〈그림 6〉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계획(안)

서천읍의 발전 과제

서천읍이 지금까지 발전하게 된 계기는 광역교통망의 발달에 기인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모듬살이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서천군이 표방하는 전국 제일의 생태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서천읍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현재 서천읍을 둘러싼 여건변화들은 서천읍에 무

엇을 요구하고 있을까를 생각해봐야 할 시기인 듯하다.

광역교통망의 건설에 따른 생활권의 역외유출현상 심화, 대규모의 관광 및 산업기능 건설에 의한 서천읍내로의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들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러한 노력들은 서천읍의 외적요인일 뿐이므로, 내부적으로 서천읍이 나아갈 수 있는 내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자구적인 준비를 차근차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서천읍은 사람과 재물이 모여서 잉여생산을 도모하는 도시의 속성에 비춰 봤을 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중심상점가의 활성화가 그 한 예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로를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및 상업서비스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서천특화시장, 후적지 재래시장, 버스터미널, 구 서천역을 집적장소로 하는 공간 기능의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각각의 공간을 매개하고 연계를 도모해야 하는 측면에서, 주민들 삶의 쉼터로서 커뮤니티 공간의 적극적인 도입과 공공시설에 대한 디자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는 서천읍 주변사업의 개발이익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나아가서는 생태도시로서 서천읍의 도시상을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천군 자체적으로 인구 10만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교육·의료·문화·복지면에서 도시적 편리성을 누리며, 자동차 위주가 아닌 보행자 위주의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단편적인 도시개발사업에 한정하지 말고, 종합적·통합적 시책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 중소도시는 어떻게 하면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까를 고민하고 있다. 이론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현장에서 접목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서천읍은 이와 관련된 시책을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시에는 전국의 모범사례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서천군, 서천통계연보, 각년도.
2. 서천군 홈페이지, www.seocheon.go.kr

‘제8회 보령천북굴축제’ 를 가다

이용원 | 월간 ‘토마토’ 편집실장

천북면 장은리에서 만난 제철 굴
갯바위에서 자라는 영양 만점 ‘석화구이’



가는 날이 장날이었다.

살금살금 운전을 하는 내내 축제를 준비하는 측은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 갔을지 쉽게 짐작이 됐다. 눈다운 눈을 구경하기가 최근 쉽지 않았는데 축제 전날 하늘이 작정이라도 한 듯 눈을 토해냈다. 보령시 천북면사무소에 전화해 축제 개막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야 길을 나선 참이었다. ‘제8회 보령천북굴축제’는 그렇게 대설주의보·한파주의보와 함께 시작했다. 온화한 날씨엔 ‘겨울축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가는 길 불편하고 불에 부딪히는 바람이 칼 같아도 추운 것이 낫다고 스스로 위안하며 도착한 ‘천북면 굴 단지’는 뽕뽕 얼어붙은 하늘을 배경으로 동실 떠 있는 프랭카드로 축제가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충남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홍성호 끝자락 서해바다와 맞닿은 곳에 ‘천북 굴 단지’가 있다. 동네 주민들은 이곳을 갯마을이라 부르고 있었다. 시원하게 바다가 펼쳐져 있고 건너편으로는 남당리가 손에 잡힐 듯 보였다.

서해에 있으면서도 물빛을 제외하고는 남해 바다를 많이 닮아 있다. 바다를 마주보며 둥근 비닐하우스 형태로 지어 놓은 상가 수십 곳이 늘어서 있고 그 앞에는 망태에 들어 있는 굴이 가득 쌓여 있었다. 차가 밟아 놓은 눈은 골을 만들고 녹은 눈은 물웅덩이가 돼 걷기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축제 개막 첫날 가게 앞에 쌓여 축축하게 녹아가는 눈을 치우느라 주민들은 어수선하고 분주했다. 그 손길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고소한 굴밥, 시원한 굴 칼국수

“오늘 사람이 제일 많이 와야 하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걱정이네요. 춥기는 또 왜 이렇게 추운지....”

가게 앞에 서서 지나는 사람에게 들어올 것을 권하던 아주머니는 하늘을 원망했다. 점심시간이어서 그런지 날씨 때문인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자 묻지도 않고 빨간 대야에 굴을 잔뜩 담아 내 온다. “아니요, 굴 구이는 저녁에 먹을 생각이에요. 그냥 굴밥하고 굴 칼국수 주세요.”



대야를 도로 가져가며 아주머니는 가스버너에 불을 붙인다. 그냥 있으면 추우니 그렇게 불을 켜고 있으라는 배려였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온 아주머니는 굴을 몇 개 가져와 버너 위에 올려놓는다. 기다리는 동안 구워먹으라는 말과 함께 보내주신 인심이 좋았다.

굴밥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 때 작은 솥에 밥을 짓는 모양이었다. 그렇게 바로 지은 굴밥을 그릇에 덜어 양념간장과 함께 냈다. 굴밥은 고소한 맛과 향이 진했다. 입안에서 툭툭 터지며 진한 향을 풍기는 굴 맛과 시원한 동치미 국물이 기가 막히게 어우러졌다. 충청도 음식 특유의 강렬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밋밋하지도 않은, 바로 그 맛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굴밥이 담겨 나오는 그릇이다. 그냥 잔칫집에서 국수 말아 줄 때 쓰는 하얀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하고 있었다. 추운 날씨에 음식의 온도가 금방 떨어져 좋은 굴밥 맛을 떨어뜨렸다. 조금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개인용 돌그릇 등 음식물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손님 대부분이 굴밥보다는 굴 구이를 더 많이 찾긴 하겠지만 작은 배려가 더욱 강한 인상을 남기지 않는가. 밥을 지은 솥에 물

을 넣어 만든 송능을 솥 채 내 주는 것처럼 말이다. 그 솥에 붙어 있는 누른 밥을 잘 긁어내니 아주 맛있었다.

굴밥 말고도 식사거리로 굴 칼국수가 있다. 제대로 끓인 굴국을 먹어 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그 시원함이 다른 어떤 해산물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 시원한 굴국에 끓여 낸 쫄깃한 칼국수 역시 굴밥과 함께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었다.

다양한 특산품 판매 및 시식코너 운영

배도 든든하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주차장 옆에 마련해 놓은 대형 천막이 눈에 들어왔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곳이었다. 살짝 열어놓은 출입문으로 들어서니 무대에서는 초대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객석에는 주민들이 앉아 호응하고 있었다. 외지인 보다는 인근 주민들이 더 많아 보였다.



어디 축제가 꼭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겠는가? 그렇게 주민들 모여 한바탕 박수치고 즐기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았다. 한쪽에 전시해 놓은 바다음식 코너가 좀 웅장மாக 보인다는 것만 빼고는 괜찮았다.

대형 천막 옆에는 지역 특산품 판매·홍보 부스가 설치되었고 그 옆에서는 돼지를 통으로 걸어 바비큐를 만들고 있었다. 호박고구마를 넣어 만든 가래떡을 무료로 나눠주고 돼지고기를 뜯어 입에 넣어 주기도 했다. 굴 맛만큼이나 모두 맛이 좋았고 더구나 후한 인심이 그 맛을 더욱 키웠다.

대형천막과 옆 부스에서는 축제기간 내내 다양한 행사와 시식회가 펼쳐진다고 한다. 또 축제기간인 12월 27일에는 해넘이 행사와 소원빌기 행사가 오후 4시부터 열린다. 서해가 눈앞에 펼쳐진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석양빛은 이미 알려진 사람들에게는 꽤 알려진 모양이다. 또, 내년 2월 7일에는 대보름행사가 펼쳐진다. 떡 만들기 체험행사와 민속놀이, 달집태우기 등이 펼쳐진다니 기억해 두었다가 한 번쯤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시식음식도 맛보고 가게 앞에 가득 쌓아 놓은 해산물도 구경하면서 즐겁기는 했는데 파고드는 추위가 영 견디기 어려웠다. 그것만 아니라면 바닷가에서 산책을 즐기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겨울 축제라는 특징상 한쪽에 조용하고 따뜻한 휴게실 하나를

마련해 두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에 간단하게 굴밥이나 굴 칼국수로 요기한 후 주변을 둘러보다 저녁 즈음에 굴 구이로 마무리하려는 참가자들을 위해서 말이다.



굴 축제의 꽃, 고소한 석화 굴이

이번에는 굴 구이다. 가게가 너무 많이 준비하다보니 맘에 드는 가게를 선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규모가 조금씩 다르고 의자가 아닌 온돌 형태로 앉아 먹을 수 있는 곳을 따로 갖춘 곳이 있다. 인원이나 연령 등을 고려해 결정하면 될 터다.

굴 구이를 먹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있다. 장갑과 집게, 스테이크용 나이프, 심지어 고글도 필요하다.



가스버너 위에 껍질 채 올려놓고 잠시 시간이 흐르면 ‘탁탁’ 소리를 낸다. 이 때 자주 뒤집어 주어야 덜 튈다. 주구장창 내버려 두면 작은 폭발과 함께 굴 껍데기가 사방으로 튈다. 얼굴에 튀면 꽤 따갑다. 아이들이 같이 있다면 눈에 들어가지 않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꼭 다물고 있던 껍질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할 때가 중요하다. 앞에 놓인 도구들을 적절하게 이용해 살짝 껍데기를 벌려 본다. 그곳에 바닷물 머금은 굴이 다소곳하게 들어앉아 있다. 개인 식성에 따라 굵기를 조절하여 초고추장에 찍어먹으면 된다. 굴 한 마리가 담고 있는 서해바다의 맛은 참 싱그럽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이 익히며 굴이 담고 있는 향과 맛이 반감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천북에서 나는 굴로 어떻게 다해요. 일부는 외지에서 가져와요. 통영 굴보다는 여수 굴을 가져다 써요. 맛이 조금 더 낫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가져온 굴도 여기 천북 앞 바닷물에 담갔다가 써야 맛이 더 괜찮아져요. 그냥 쓰는 것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니까요. 천북 굴이 맛있는 것은 아무래도 물 때문인가 봐요.”

식당 주인 얘기다. 굴이 외지에서 들여 온 굴을 함께 쓴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하긴 뭐, 숨길 일도 아니다. 그래도 역시 천북 굴 맛에 대한 자부심은 갖고 있었다. 천북 앞 바닷물과 바닷바람이 만들어주는 그 맛 말이다.



한 가지 더, 지난해 이맘 때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상가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천북 지역은 전혀 피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서해안 일대’라는 표현을 써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러니 안심하고 몸에 좋은 굴 맘껏 먹어도 되겠다.

굴 구이는 네 명 정도 먹기에 적당한 한 대야에 2만5천 원이다. 굴밥은 6천 원, 굴 칼국수는 4천 원이다. 이외에 조개구이나 조금 더 있으면 주꾸미도 맛볼 수 있다.

석양빛이 아름다운 천북면 장은리 굴 축제는 내년 2월까지 계속되지만 4월 즈음에 찾아가도 굴 맛을 볼 수 있다.

굴 구이를 석화 구이라고도 한다. 돌에서 피어나는 꽃 같다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이다. 인류가 굴을 먹은 것은 선사시대로 올라간다. 많이 발견되는 선사시대 조개더미에서도 알 수 있고 <전어지>나 <자산어보> 등에는 굴의 형태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한다.

굴은 9월에 채취에 들어가 다음해 4~5월까지 계속되고 늦가을부터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 가장 맛이 좋다. 굴을 바다의 우유라고 부르는 것처럼 굴이 가지고 있는 영양은 풍부하다. 비타민과 미네랄뿐만 아니라 철분, 칼슘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고 다른 어패류보다 소화도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아이나 노약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빈혈과 간장병 환자의 체력회복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월 주목할 만한 충남 축제

■ 황도 봉기풍어제



- 일 시 : 2009년 1월 27~28일 예정 (매년 음력 정월 초이틀과 초사흘)
- 장 소 : 태안군 안면읍 황도리 당집 주변
- 문 의 : 태안군 문화관광과(041-670-2433) 또는 황도리 이장님
- 내 용 : 안면도 동북쪽 끝에 자리하고 있는 황도는 면적

2.5km², 해안선 길이 16km인 아담한 섬으로, 1982년 황도교가 완공됨으로써 안면읍과 연결됐다. 보리가 익으면 누렇게 보인다고 해서 이름 붙은 황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초이틀과 초사흘에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는 충남 최대규모의 풍어제인 황도 봉기풍어제를 지낸다.

옛날에 황도 어민들이 자욱한 안개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섬에서 비치는 밝은 빛의 인도를 받아 무사히 귀향하게 되자, 빛이 시작된 곳에 당집을 짓고 풍어제를 지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봉기풍어제는 1977년 제1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현재 충남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어 있다.

■ 예산 달집축제



- 일 시 : 2009년 2월 9일 예정 (음력 정월 대보름)
- 장 소 : 예산군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 주 최 : 예산문화연구소 (041-331-3322)
- 내 용 :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정월대보름은 설이나 추석만큼이나 중요하고 큰 명절이었다. 지금이야 그 가치가 덜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를 즐긴다. 2009년 정월 대보름인 2월 9일 즈음에 예산군에서는 '달집축제'가 열릴 계획이다.

소원빌기와 윷놀이 대회, 축하공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니 가족과 함께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참고적으로 정월 대보름에는 예산군을 비롯한 각 시·군별로 다채로운 행사 계획을 내놓고 있으니 가까운 곳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 남당항 새조개 축제



- 일 시 : 2009년 1월~5월경
- 장 소 :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행사장
- 문 의 : 새조개축제추진위원회 (041-632-8234)
- 내 용 : 굴 구이만큼이나 맛있는 해산물 중 하나가 바로 새조개 샤브샤브다. 서해안의 신선한 새조개를 맛볼 수 있는 철이 다가오고 있다.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에서는 매년 1월부터 5월까지 새조개 축제를 연다. 축제 기간이 긴 만큼 언제든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제대로 된 새조개 맛을 보고 싶다면 3월 전에 가는 것이 좋다. 바람에 찬 기운이 남아 있을 때 말이다.

행사기간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연 등이 펼쳐지니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도 좋겠다.

식품산업에서 충청남도의 미래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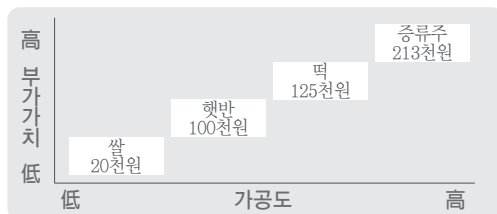
이숙경 |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장(식품공학과 교수)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종사자는 2006년도 163만 명으로 어느 업종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았으며, 우리나라의 식품산업 시장은 100조원, 세계시장은 약 6,000조원으로 자동차나 IT시장보다 큰 규모였다. 향후 식품산업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인구 증가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충청남도는 식품산업을 전략상품화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용성 있는 정책을 하루 빨리 시행하여야 하겠다.

식품산업의 매력은 <그림>과 같이 가공하는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를 10배 이상 높일 수 있으며, 음식은 마음을 나누면서 자국의 전통과 문화를 담고 있어 문화의 옷을 입힌 식품으로 상품화될 경우,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게 되므로 생산지역의 다양한 콘텐츠와 문화상품의 개발 및 지역축제와 연결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요즈음, 뉴욕에 불고 있는 아시안 Food 열풍에 일본, 중국, 태국 등은 독특한 자국의 전통음식과 식품을 선보이며, 미국의 대중화된 식문화의 하나로 자리잡아 높은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태국은 “Kitchen of the World” 프로젝트로 태국 식당 수와 식자재의 수출을 증가시켰으며, 일본은 스시로 일본 문화를 유행시켰고, 갈비나 불고기를 마치 일본 음식처럼 인기리에

판매하는 실정인데 비해 유독 한국 음식은 아시안 Food 열풍 속에서 열외되어 있다. 하마터면 김치도 “기무치”라 하여 일본이 김치의 종주국으로 국적이 변경될 뻔한 일이 있었던 걸로 보아 음식과 식품은 현지 국가에서 먼저 대중화시키는 쪽이 주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시는 기무치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지원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하겠다.

지난해 9월부터 미국 대학에서는 최초로 하루 약 2만 명이 이용하는 로스엔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교(UCLA)의 식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불고기와 비빔밥, 그리고 김치 등의 한국 음식이 선보이기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미국 사회를 이끌 재목들인 UCLA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한식의 세계화와 더불어 우리의 문화를 미국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김치와 비빔밥을 통해 전통음식이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식품산업의 희망을 보았으며, 우리나라의 김치는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되었을 뿐더러 수출이 수입 대비 3배 이상의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에, ‘한식 세계화 선포식’을 갖고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세계 식품시장에서 많은 선진국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식품시장의 글로벌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2012년까지 5조원을 지원하는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지난해 11월에 발표하였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민·관 공동의 R&D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전국적으로 시·도, 시·군 단위의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 농식품 산업의 구심점으로 육성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산업체에 실제 필요로 하는 연구가 적시에 이루어지려면 민·관·학·연의 연구팀을 지역별로, 식품산업체별로 엮어주는 정책이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며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전라북도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맛보았던 비빔밥을 전주비빔밥으로 산업화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최근 새만금 지역에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중이고, 전북프랜차이즈협회는 상호 ‘JFRAN’으로 지역 내 중소 프랜차이즈들의 전국 유통 및 물류망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충청남도에는 지역 4년제 대학에서 ‘식품위생 및 법규’를 담당하는 교수들이 16개 시·군의 전통식품과 특작물을 이용한 식품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비영리 민간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그 결과, 연기군의 복숭아, 청양군의 맥문동을 이용한 음료수와 보습팩을 개발, 생산토록 지원하고 있어 결코 전라북도에 뒤지지 않은 준비된 연구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충청남도의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충청남도의 발전에 싱크탱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충남발전연구원 등 관련 연구 기관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충청남도의 농수산물정책은 충청남도의 16개 지역 특산물을 가공식품으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한계를 벗어나 고부가가치의 화장품에 접목하는 일을 계기로 생활용품 등으로 폭 넓게 응용하려는 발상이 필요하며, 도내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식품의 맛과 멋, 기능성을 백제문화에 접목한다면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인다”라는 말처럼 충청남도의 식품산업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문화상품”으로 충분한 가치와 승산이 있음을 금년 백제문화제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다.

백제문화제에 160만 명이 다녀갔으며,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한 157개 국가의 한인회장 120명이 2박 3일 동안 백제문화를 만끽한 후 충청남도가 제 2의 고향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했던 일은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창립된 후 처음 있었던 일로 이는 민-관이 하나 되어 이루어낸 결과로 충청남도의 식품을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Network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된다.

충청남도의 식품산업체는 지난 7월에 지정된 유망 중소기업 28개 업체 중 단 한곳도 선정

되지 않은 열악한 실정이지만, 세계 속에 충남인을 만들어낸 지혜와 열정으로 식품산업의 경제성과 경쟁력을 위하여 농어업과 식품산업을 연계함으로서 농·어업인이 지분에 참여하는 농식품 기업을 원스톱시스템으로 육성하는 충청남도의 식품산업 정책을 기대해 본다.

이러한 정책으로 농수산물의 생산자는 판로를 확보하고 기업 이윤의 배당 등을 통해 소득이 향상되고, 식품산업체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식자재를 저비용으로 공급받아 안전성이 높은 식품을 생산함으로써 고효율의 부가효과를 얻을 수 있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중심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안전한 식품은 개인의 건강은 물론 인류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며, 특히 식품은 문화를 동반하는 사업이므로 충청남도라는 상품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이기에 식품산업에 충청남도의 미래를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허준’ 처럼 관심을 모을 방법은?

정 종 수 | 대전MBC 기획위원(前대전MBC 편성국장)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이 TV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시청률이라는 것이 있다. 전체 TV중 해당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TV대수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두 개의 시청률 조사기관(회사)이 서울을 비롯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시청률 조사를 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TNS와 AGB닐슨 등 두 회사에서 대전에 있는 150~200가구에 피플미터라는 장치를 달아주고 시청하는 채널을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있다.

시청률은 각 방송사와 광고주 등에 유료로 제공돼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 광고시간 결정과 효과 분석 등의 자료로 사용된다. 시청률은 더 세분돼 분당(分當) 시청률 같은 자료도 있어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어느 장면이, 어느 순간에, 얼마나 관심을 끌었는지를 알 수도 있다.

매일 아침 배달되는 이 시청률이라는 괴물과 싸우느라고 방송사 직원들은 머리를 짜내는 한편 자료조사, 출연자 섭외, 옥내·외 녹화, 편집, 취재, 기획회의 등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신문에서 독자수(유료 발행부수)와 비견되는 이 시청률에 각 방송사들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는 것은 결국 광고유치(회사 수입)와 방송사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 때문이다.

몇 년 전 MBC-TV에서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방송할 때 그 시간에는 거리의 택시 운행이 뜸했고, 수도물 사용량도 줄었으며(화장실 이용도 줄었으므로) 전화 통화량이나 술집 매출도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또 그 시간에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들이 넘쳐나 줄을 섰다고 한다. 당시 그 드라마의 시청률은 70%를 넘나들었다. 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학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한 공을 들어 제작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는 뒷얘기도 남겼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변에서 알아주면 신명이 나고 일의 성과도 높아진다. 또 하는 일의 내용이 잘 알려지면 관심을 갖는 사람이나 협조하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바르게 알려져야 오해로 인한 마찰을 줄이고 일의 추진력을 확보하게 된다.

개인이든 단체든 하는 일을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이 때문이다. 많은 소비자가 필요한 상품이나 지지자가 많을수록 좋은 정치세력, 일반인의 참여가 성패를 가름하는 NGO나 팬들의 갈채를 먹고 사는 연예인 등에게 홍보, PR, 선전, 광고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이유이다.

충남발전연구원에 이사로 참여한지 여러 해가 되었다. 충발원은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 크게 성장을 했고 많은 성과를 올리는 모습을 보았다. 지난해에는 부러워할 만한 사무실도 마련했다.

종종 집에서 받아보는 연구결과 보고서에는 연구원들의 땀이 배어있고, 조직 구성원들의 애정이 짙게 묻어있다.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책으로 엮어 배포하는 일 또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나 자신 대전MBC 사보를 12년간 매월 발행한 경험이 있어서 그 작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제안을 해 본다. IT강국 한국답게 e메일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나는 매일 몇 개의 메일을 받아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보내는 SERI 매거진을 통해 국내·외 경제동향을 살피고, 디트뉴스가 제공하는 메일을 읽고 메이저 신문·방송에서 취급하지 않는 우리고장의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으며, 고도원의 아침편지가 배달되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만약 충청연의 연구물과 관련 동정이나 소식들이 대전·충남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메일로 전송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우리고장 출신 국회의원과 출향인사, 지자체 의원, 도·시·군청의 공무원, 주요 기업의 경영자, 주요 언론사의 기자와 제작 담당자, 기타 주요 인사들에게 우선 주 1회 이상 메일을 보낸다면 적어도 몇 천 명의 인사들이 충청연의 활동 내용을 알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관심과 이해와 협조를 보낼 것이다. 최소한 충청연이 어떤 곳이라는 정도는 기억할 것이 아닌가?

요즘 흔히 말하는 One Source Multi Use(OSMU, 하나의 자료를 여러 방면으로 쓰는 것, 예를 들면 한 작품을 TV와 극장, 비디오로 사용하는 것 등) 개념과도 부합되는 일이다. 경제효과를 극대화 시키자는 말이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지금 잘하고 있다. 금상첨화, 주마가편하는 마음으로 쓴다.

충남 전시예술의 발전 방안

박동교 | 한남대학교 교수, 한국미협 대전시지회장



예술 활동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사회의 정치, 문화, 경제 등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20세기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시작된 21세기는 정보화를 중심으로 인간의 문화 예술 활동이 정신적인 사회간접자본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가치창조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술 활동은 사회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그 사회의 가치나 목적에 따라 발전도, 쇠퇴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와 예술은 함께 공존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문화 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문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문화예술이 주는 가치와 더불어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정한 정신적 풍요로움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예술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는 것과 동시에, 실질적인 혜택을 시민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경제나 문화, 교육 등의 발전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지역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체계적인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예술인의 노력과 아울러 官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 전시예술의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를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전시예술이란?

전시예술의 핵심적인 요소는 작가, 작품, 전시장, 관객 등에 의하여 이뤄지며 전시를 통해 인간의 감각에 정서적으로 호소하는 총체적인 예술을 지칭한다. 이는 시각을 매개로 전달하고자 하는 회화, 조각, 서예, 디자인, 공예, 비디오 아트, 퍼포먼스 등을 포함하는 예술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전시기획은 때에 따라, 작품의 성질에 따라 보편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획자는 치밀한 계획을 요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작품에 대한 애정이다.

전시예술 현황

충남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으며 서해안 개발, 신 행정수도 건설 등 개발 붐을 타고 대학 신설 및 이전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의 작가군과 매년 늘어나는 예비 작가 등 수많은 인적 자원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공간과 지역 전시예술의 지원 예산 또한 턱없이 부족하며 그 환경이 매우 열악한 풍토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15~16세기 지역색이 독특한 철화분청사기 생산지인 계룡산자락에 작가 등 공동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각각의 개인공방을 설치하고 도예계에 새롭고 신선한 방향을 제시하며 형성된 계룡산도예촌은 자연적 집성촌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1995년 공주시로부터 농·어촌 특산단지 자금을 지원받아 종합전시장과 전통 가마를 지으면서 그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열악한 사정으로 인한 부조화스런 건축물과 전무한 조경은 방문객으로부터 아쉬움을 남게 하는 과제로 남겨져 있다. 또한, 넉넉지 못한 부지평수는 도예가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재래식 전통가마를 지을 수 없어 가마 소성의 한계를 극복치 못하고 있어 더욱 아쉬움을 남긴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예축제와 계룡산분청사기작가전, 해외교류전,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 등 작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개인별 영역을 넓히며 많은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 결과 철화분청사기에 대한 호감도는 급증하고 있으며, 학술적으로나 작품의 질·양적

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경기 이천의 세계도예축제나 전남 강진의 청자축제는 그 규모나 기반이 세계적인데 비하여 계룡산 도예촌의 현실은 어떠한가?

광주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등은 지자체와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문화적 성장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비하여 공주자연비엔날레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러한 행사의 추진은 추상적 구호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제는 충남의 전시예술이 그간의 냉정한 성과 분석을 통해 새롭게 전진해야 할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발전 방안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한 문화정책과 비전을 위해서는 공인된 예술단체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며 전문성 있는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官 또한 행정 마인드를 개선하고, 문화 시설의 확보와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행정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지역 전시예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 미술수입에 의존하는 정책은 일시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지역미술계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이 자국의 작가를 키워 세계미술 시장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은 국가 경쟁력을 문화에 투자한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우리만이 갖고 있는 문화를 연구하고 계발하여 지역작가를 키워 내는 일은 장기적으로 지역의 위대한 문화유산이 될 것이다.

21세기는 문화경쟁력 시대라고 한다. 이는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인 산업의 구조가 문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와도 상통한다. 침체된 경제의 현실 속에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의 국제교류 및 전시를 통하여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세계 속의 문화도시, 충남”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광역경제권의 성공조건과 과제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정부는 지난 7월 20일 지방분권, 특화, 협력과 경쟁, 광역경제권 육성 등 4대 기본방향과 국토성장 잠재력 확대, 新성장동력 발굴과 지역특화발전, 지방분권 강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및 기존 균형발전정책의 발전적 보완 등 5대 추진전략이 포함된 ‘新지역발전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9월 11일에는 앞으로 5년간 56조원이 투입되는 ‘30대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광역경제권이란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된 지역을 한데 묶어 종합적인 경제 발전전략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간발전정책이다. 광역경제권 육성정책은 그 동안에도 여러 차례 시도되었고, 현재도 전국적으로 8개의 광역권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광역권개발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사업추진에 따른 기존 지방행정체계와의 불일치,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행착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하향식 추진방식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편리를 위해 중앙정부가 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물론, 새 정부는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강화를 지역발전정책의 기본 방향 및 핵심추진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어서 이번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에서는 지역주도의 계획수립 및 추진체계 확립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집행관행을 보면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정책방향과는 달리 중앙정부 주도의 추진방식은 쉽게 불식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실패의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다. 광역경제권이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단위가 되어야만 지역의 창의력과 잠재력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자율적인 지역발전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그리고 지역단위의 자율적인 발전 역량의 강화 없이는 특화된 경쟁력을 지닌 지역경제기반 구축은 기대하기 어려운 밀접한 상호 관계를 갖고 있다.

둘째, 광역경제권 계획은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인위적인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발전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산발적이고 중복적 투자가 불가피하고,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성이 증대된다. 세분화된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단위의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발전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야만 집중 투자와 연관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광역권계획에서는 종합전략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 특정한 시책과 사업 추진에만 치중해 왔다. 정부의 대규모 시책과 사업은 광역경제권 계획이 없어도 추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광역경제권 계획을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남발로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셋째, 광역경제권 계획은 기존의 다양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통합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 광역개발계획과 시책은 여타 지역계획과 분리되어 추진된 바, 지역발전 추진과정의 혼선과 낭비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계획이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도 단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및 장기종합발전계획 체계의 조정과 관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기존 계획체계의 정비 없이 새로운 계획체계를 무분별하게 도입함으로써 막대한 행정 및 재정손실을 초래했다. 광역경제권의 도입은 일관된 정책목표와 전략이 반드시 정의되어야 하고, 이는 곧 지역성없는 개별적 시책과 산발적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새 정부 광역경제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중앙정부 주도적인 정책추진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책 수립과정에서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지역 여론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급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은 과거가 아닌 앞으로 '잃어버릴 10년'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도일보, 2008-10-2, 21면〉

문화의 중심, 명품충남의 건설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충청남도는 민선4기 출범 이후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이라는 도정기조 아래 경제 분야에서 “1등 충남”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민선4기 전반 2년 동안 전국 평균 5.1%로 거의 2배에 달하는 년 평균 9.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무역흑자는 전국의 무역흑자 규모 146억불 보다 높은 211억불을 달성했다. 또한, 지난 2년간 국내자본 34조5,000억 원과 외자 3조5,0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38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1,637개에 달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충청남도가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도정의 총체적 역량을 경제 활성화에 결집시킨 지방행정 지도자의 열정과 리더십,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직원들의 헌신적 노력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공존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충청남도는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경제적 활력과 성장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경제성과가 주민 복지 증진으로 이어져야 하고 지속적인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 민선4기 후반 도정 기조를 “문화의 중심, 명품충남”의 건설로 설정했다. 21세기 감성이 지배하는 정보와 지식사회에서 문화는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새로운 부와 고용을 창출’하는 미래 성장 동력임에 틀림없다.

“문화의 중심, 명품충남의 건설”로 대변되는 충남의 민선4기 후반 도정기조는 충남의 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이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단순히 경제적 차원이 아닌 문화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의 예술과 문화의 진흥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란 역사와 전통을 통하여 축적된 삶의 총체적 모습을 지칭하기 때문에 예술과 문화의 경계를 훨씬 초월하는 개념이다. 그

러나 지역만의 특수한 예술 문화의 진흥없이 “문화의 중심”을 자처하기 어렵다. 예술과 문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정신과 치열한 자기 연마의 산물이다. 이는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만으로 쉽게 향상되거나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남은 지역예술인들이 자기기량을 연마하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과 기반을 만드는데 치중해야 한다. 예술 문화 활동 공간 및 시설의 확대, 그리고 예술 문화 활동 지원 체계구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술과 문화 활동을 정치-경제 여건에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관 협동의 문화재단 설립도 시급하다. 지역사회 주도의 문화재단 설립은 지역사회의 문화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예술인의 동참과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문화적 삶의 수준이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우선은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예술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예술과 문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접근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마을 및 소지역단위의 활발한 예술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술문화 공간 확대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공간과 시설을 활용한 유럽의 광장과 거리 예술 공간, 다양한 소단위 공연 활동이 하나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은 주민에게 여유로움과 행복감을 주는 미적 감각을 갖춘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이다. 문화 진흥은 공공 디자인 및 경관정책 등 도시 및 지역개발과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문화산업 육성의 기반 강화이다. 다양한 콘텐츠를 지닌 국내 문화산업의 매출규모는 50조원을 상회한다. 문화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그 만큼 크다는 의미다. 충남이 명실상부한 “문화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문화는 ‘동경과 환상’이 아니다. 충남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한 문화의 “명품화” 전략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가치로 키워 온 지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 본다.

(충도일보, 2008-10-30, 21면)

비전없는 국가경쟁력 강화 대책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정부는 지난 달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대책은 농지와 산지 전용 등 토지이용과 수도권 규제를 풀어 산업용지를 보다 싸고 쉽게 공급하여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글로벌 신용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와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 대책은 장기적인 비전없이 단기적인 정책효과에만 급급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국가적 피해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농지와 산지의 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 지금 당장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가져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계획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산지와 농지에 대한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한계농지는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하고, 일반농지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 없이도 전용과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철저히 개발이 억제되어 온 보전지역과 농업 진흥지역마저 공공용지로 전용토록 하였고,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대폭 축소토록 하고 있다. 산지와 농지보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없이 일시적인 효과를 위해 개별적인 규제만을 완화하는 경우 장기적인 차원에서 후유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대폭적인 해제를 추진함으로써 30년 넘게 지켜 온 우리 미래의 환경자원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308km²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서민주택의 건설과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308km²는 인구 40만 명이 넘는 분당 신도시 16개를 건설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강과 여가 활동을 위한 녹지와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린벨트의 경계는 경기침체와 불황과 같은 시대적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신성불가침”의 대상으로 존중되어 왔음을 상기했으면 한다.

셋째, 수도권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로 국가공간정책의 기본 틀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수도권규제시책은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 혼잡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여 국가발전 잠재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공간정책이다. 이는 지난 40여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틀을 유지해 오고 있는 이유다.

국가공간정책이 한번 훼손되면 회복할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수도권 내에는 산업단지 건설과 대기업 공장의 신설 및 증설, 이전이 가능하게 되고, 개별공장의 건설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한강의 수질과 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도 크게 확대된다.

결국 수도권 규제시책의 기본 틀이 무너지게 됨으로써 수도권의 무분별한 양적 성장과 과밀·혼잡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방발전의 상대적 위축과 침체를 고착화시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과밀혼잡으로 인한 물류비 증대 및 지가 양등, 환경오염 등 산업발전을 좀 먹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즉, 지방경제의 침체와 공동화 현상은 다양한 국토자원과 발전 잠재력을 사장시켜 결과적으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현재의 심각한 경제침체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언 발에 오줌누는 식’의 임기응변적 대응이 ‘재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카드는 아님을 명심했으면 한다.

(중도일보, 2008-11-27, 21면)

지방중소도시, 미래형 전원도시로 거듭나야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우리나라 지방중소도시는 대부분 도시와 농촌 공간이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지방중소도시들이 일견 산만하고 짜임새가 없어 보인다. 특히 농촌 기반의 정주체계를 지닌 군(郡)지역이 도시로 성장한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원래 도시는 분산적인 농촌 정주체계와 달리 주거, 생산 및 소비 등 다양한 기능을 한정된 공간에 집중시켜 불필요한 통행거리를 줄이고 집적의 이익을 높이는 정주공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중소도시는 무질서한 공간구조와 비효율적인 토지이용 체계를 갖추고 있어 기능적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기존의 도시개발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도시의 분산적이고 무질서한 공간구조는 효율적인 도시정비와 관리 차원에서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중소도시의 정비와 발전방안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산만한 도시개발을 재정비하여 계획적인 신항시가지로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방중소도시를 신시가지개발 방식으로 정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도시인구 증가는 이미 한계에 달하여 신시가지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장수요와 자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중소도시들을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공존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전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이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이 혼재된 지방중소도시의 특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역발상적인 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토지소유와 이용체계로는 지방중소도시를 새로운 형태의 전원도시로의 가꾸어 나가기 쉽지 않다. 도시 내 농지는 도시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수십 배의 자산 가치증식이나 투기적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도시 내 농지 소유자는 누구나 기회만 되면 자산 가

치를 높이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안정적인 도시개발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안정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는 부동산 투기수요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첨단기술 및 정보·지식 기반의 산업구조와 인구 감소 추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층의 결혼 감소와 저출산 추세는 새로운 토지와 주택 개발 수요를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공평과세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어 부동산 투기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 도시 내 농지에 대한 공평과세를 통하여 농지의 투기적 수요를 방지하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안정적인 전원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도시의 농지는 언제든지 도시용도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지와 같은 등급의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소유자가 농지의 영구보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는 낮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반면, 영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감면된 재산세를 전액 환수토록 하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지방중소도시 내 농지 전용과 투기 억제 조치만으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원도시를 조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도시 내 농지의 경제적 활용증대 및 도시와 농지 간 계획적 연계와 보완체계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중소도시 내 무질서하게 산재된 농지를 도시민을 위한 여가, 위락 및 농촌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앞으로 지방중소도시는 미래형 전원도시로서의 잠재력과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비전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

도시의 공간적 질과 형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도시는 수많은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노력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나타나는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충청권의 도시들도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미래형 전원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충도일보, 2008-12-25, 21면]

충남도 경제 순풍, 태극제약과 MOU 체결

- 의약계 유망 중소기업 태극제약(주) 부여 초촌면에 투자확정



충남도가 국내 유망 중소기업인 태극제약(주)의 부여군 유치를 확정하고 지난 9월에 이어 2주 만에 충청남도·부여군·태극제약(주)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이창구 태극제약(주) 대표이사, 김무환 부여군수는 10월 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부여군 초촌면 응평리 일원에 신규 투자 및 도와 부여군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협의하고 적극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태극제약(주)은 부여군 초촌면 응평리 342-9번지 일원의 53,000㎡에 2014년까지 총 1,350억 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이전 및 신규투자 하기로 하였다.

태극제약(주)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2008년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09년 건축공사 및 기계설비, 부대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투자하여 2009년부터 건강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고 2012년 의약품, 2013년 화장품 등 2014년까지 모든 생산라인을 가동할 계획이다. 생산 초기에는 약

430억의 매출을 보이며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1,350억의 매출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충남발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MOU체결로 충남도에 향후 6년간 1,715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224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로 인해 물가상승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는 부여군과 함께 국내 유망 중소기업인 태극제약(주)의 유치를 위해 꾸준한 설득과 협상으로 부여군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국민 건강의 일익을 담당하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나라 유망 중소기업인 태극제약(주)을 우리도에 유치키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환영한다”며 “「강한 충남, 1등 경제충남」을 이룩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무환 부여군수는 “국내 유망 중소기업인 태극제약(주)이 부여군에 동지를 틀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이완구 충남도지사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 태극제약(주)은 부여군 경제발전의 구심체 역할과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며, 태극제약(주)의 사업 로드맵이 순조롭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성과중심 조직운영으로 도정성과 극대화

- 성과관리(BSC), 불필요한 사업 배제, 책임경영제 등



충남도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 서만철 공주대 교수)에서 2008년 성과관리 중간점검 결과 8월 말 현재 1,874개 성과관리 지표 중 정상추진 1,723건, 지연처리가 151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요성과로는 ▲「실국장 책임경영제」 전실·국 확대 운영을 통한 도정의 생산성 향상 ▲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를 통해 충남의 인삼수출액 4,000만 불 달성 ▲도지사 해외 투자유치 순방 및 해외투자사절단 파견 등을 통한 921백만 불 외자유치 MOU 체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2010 대백제전 국제행사 승인 ▲도청이전신도시건설 특별법 및 시행조례 제정 ▲안전충남 건설을 위한 소방관서 증설(1서 5센터 2구조대) ▲지역주민과 130만 자원봉사자의 헌신적 노력으로 청정해역을 이루어 내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자연처리 사항은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 체계 마련 부진(교육과학기술부 예산확보, 선정공고 등 사전절차 지연) ▲해외 수출 및 마케팅 활동 부진(쓰촨성 대지진 여파로 중국정부의 대외활동 축소 및 보류)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어려움(부동산 경기침체, 공동주택 준공 지연) 등 151건으로 주요원인은 중앙정부의 일정조정 등 외적요소, 중국 쓰촨성 지진 등의 불가항력적인 대외적인 원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 관계자는 당초 목표된 사업의 연내 완수는 물론 중간 점검결과 여건변화로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재검토 등을 통해 효율적 도정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 출연기관(12개)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실국장 책임경영제(semi-CEO) 운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민선4기 전반기 도지사공약 이행도 평가에서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에서는 전국 2위,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웹서비스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등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복지수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생활공간개선 평가 최우수 등 총 39건이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한 만큼 실적평가가 이루어지고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조직 내에 확실하게 하여 성과관리제도가 정착되고 발전시켜 도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2009년도 균형발전 대상사업」확정

- 도내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 22지구 842억 원 투자

충남도는 10월 14(화)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대학교수,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균형발전 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에 총 22개 사업에 총 84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2009년도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은 기 수립한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중에서 매년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산으로 확정하는 집행 계획으로 분야별 세부내역은 ▲공주시 문화관광지 조성 등 10지구 541억 원(문화·관광분야) ▲금산군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3지구 77억 원(기반시설 확충분야) ▲금산군 인삼명품화 사업 등 8지구 170억 원(지역특화 분야) ▲청양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1지구 54억 원(생산유통 분야) 등이다.

충남도는 천안, 아산, 당진 등 서북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공주·보령·논산, 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 등 8개 시·군에 2012년까지 5개년 간 총 4,79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충청권 공조체제, 2010년 ‘지역 방문의 해’ 유치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충남, 대전, 그리고 충북은 지난 10월 21일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방문의 해’ 사업의 공모심사 결과 2010년 공동 사업주체로 선정되었다.

충청권 3개 시·도는 이번 공모심사에 ‘Visit Start! Vision 2010! - 충청관광의 세계적 브랜드 실현’이라는 주제로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사업을 신청하여 전라북도과 경상권(부산, 울산, 경남)을 제치고 최종사업자로 확정되었다.

충남은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사업 추진으로 ‘2010 대백제전’ 국내·외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전의 IASP(국제사이언스파크협회) 총회, 충북의 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등의 국제행사와의 상호 협력이 가능하여 지역 간 관광분야 시너지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방문의 해를 통해 7개 문광부 선정축제의 명품화와 유류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서해안 관광활성화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잠재해 있던 충남의 관광매력을 적극 홍보하여 관광산업을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충남과 충북은 지난해 말부터 독자적으로 방문의 해 사업 유치를 준비하였으나, 충청권 광역관광협력의 필요성 대두와 서울시의 공모참여에 대한 대안으로 충청권 공동유치가 추진되었다.

이완구 지사가 지난 5월 공동개최를 최초로 제안하였고 이에 8월에는 충청권 시·도지사가 공동유치 협약서를 체결하여 마침내 방문의 해 사업을 유치하게 되었다.

앞으로 충청권 3개 시·도는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사업은 테마별 연계사업, 공동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자체사업 등으로 추진되는데, 사업의 성공은 3개 시·도의 긴밀한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추진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전, 충북, 충남이 행정구역의 한계를 넘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역사·문화·정서 등에서 그 뿌리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충청권의 공동사업추진은 광역관광발전을 위한 좋은 시도로 평가된다.

충남도, 마을별 e-고향카페 구축한다

- 2012년까지 도내 2,113 법정리 마을대상



충남도는 U-충남, U-농촌 구현의 일환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마을별 카페를 개설하여 마을 소식을 주민 및 출향인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사이버 커뮤니티를 (주)다음커뮤니케이션과 공동으로 구축한다.

김동완 행정부지사는 11월 4일 소회의실에서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문효은 부사장과 『e-충청남도 고향카페』 구축에 대한 공동 추진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며, 도내

2,113 법정리 마을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는 서버제공, 표준카페 개설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되며, 충남도는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다음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운영자 교육과 다양한 이벤트 등 운영활성화를, 시·군에서는 마을별 카페구축 및 운영 지원,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e-충청남도 고향카페』가 활성화되면 정보화 소외지역인 읍·면지역 주민과 대도시 주민간의 정보 격차가 해소되고 마을 카페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로 출향인의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마을 특산물 홍보를 통한 농어촌 소득증대 및 온라인으로 고향의 정서와 고향소식을 전해줄 수 있어 고향정보 사랑방 역할도 하게 된다.

김동완 행정부지사는 “이제는 인터넷카페를 통하여 고향소식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가 있고, 고향의 변화된 모습과 발전된 모습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출향인들의 고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남, 전국 최초로 공공디자인 엠블렘 제작

- 공공디자인 홍보로 대외적 위상 제고와 민간부문에 확산 기대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디자인 엠블렘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지난 8월 문화적 가치가 가미된 통합적 도시계획과 경관조성 및 도시재생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구상』을 발표하면서 도정 전반에 걸쳐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명품 충남을 구현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내비쳤던 충청남도가 공공디자인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식 확산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엠블렘을 제작한 것이다.

이 엠블렘의 도안은 나뭇잎 모양과 『Renovate Chungnam』(재생충남)이라는 서체를 조합한 것으로서, 자연친화적이고 경쾌한 이미지인 녹색과 청색 계열의 나뭇잎 형상에 둘러싸인 도시공간이 자연의 품안에 안겨있는 아늑하고 쾌적한 충남 미래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충남 공공디자인의 비전인 『Renovate Chungnam』을 다양한 서체 디자인을 사용하여 충남 공공디자인의 주제인 “충남, 공공디자인으로 자연을 품다”와 비전인 “재생 충남”을 유연하고 역동적이며 강한 의지로 담고 있다.

충청남도는 앞으로 각종 공공디자인 관련 행사 플랜카드와 안내 팸말, 문서, 인쇄물 등에 이 엠블렘을 삽입하여 활용함으로써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공공디자인 사

업의 對 도민 홍보를 통하여 민간부분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설립,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 등을 준비 중이며, 공공디자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자문단 운영규정」 제정과 자문위원회(30명) 구성을 마치고 충청남도과 직속기관의 공공디자인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자문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창현 충청남도 건축도시과장은 “공공디자인 엠블램을 전국 최초로 제작한 만큼 이를 적재적소에 적극 활용하여 대외적으로 우리道 공공디자인의 위상을 높이고 대내적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민간부분에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09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입장권 할인해준다.

- 서해안유류피해 복구 자원봉사자, 도내 유료관광지 무료 또는 50~20%할인 혜택

충남도는 지난해 발생한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복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2009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입장권 구입시 2009. 12. 31까지 도내 주요관광지 무료·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꽃박람회 입장권 소지자가 이용할 수 있는 충남도내 주요시설은 독립기념관, 온양민속박물관, 천리포수목원과 안면도 오션캐슬 등 숙박시설을 포함한 40여개의 관람·숙박시설로 무료 또는 50~20%의 할인가격이 적용된다.

또한 서해안유류피해복구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꽃박람회 입장료를 최대 50%이상 할인해 주며,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충남도청 도의 새마을과(042-251-2243)나, 서해안유류대책본부(041-673-8672)에서 자원봉사 인증표를 교부받으면 된다.

서해안유류피해복구 자원봉사자·유료입장권 소지자 혜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꽃박람회 홈페이지(floritop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 화력발전시설과 온실가스 감축 협약 체결

-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9,515억 원을 투자, CO₂배출원 5% 감축키로

충남도는 11월 28일(금)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군 부단체장, 기후변화정책자문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대책 2008년 최종보고회」를 갖고 도내 화력발전업체와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는 화력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도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보령·태안·당진·서천화력 등 도내 4개 업체와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9,515억 원을 투자하여 CO₂배출원단위(전기 1kwh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CO₂량)를 882g/kwh에서 832g/kwh로 5%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이날 보고회에서는 현재 도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내년에는 전기·수도 절감분에 대한 인센티브로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완구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2008년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적 활동의 원년임을 확인하고, 2009년도에는 학교·시민단체 등 각 참여주체가 함께 하는 기후변화대응 인식공유와 실천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충남도, '2008 태안 국제환경포럼' 개최

- 1년간의 복구 노력을 발판으로 국제적인 관심과 생태복원 및 지역발전방안 도출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1년을 기념하는 '2008 태안 국제환경포럼'이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충남 태안 안면 오션캐슬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충남발전연구원과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 공동주관으로 환경·생태·건강·방제분야 등 1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NGO,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며, 특히 사고 당시 파견되었던 유엔 및 국제 환경 전문가가 참석하여 지난 1년간의 복구 노력과 현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환경 복구와 국제 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이번 포럼은 유류유출사고의 극복 과정과 130만 자원봉사의 승리에 대한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해양 유류오염사고 극복과 재인식 ▲생태·건강 영향평가 및 환경복원 방안 ▲사회적 영향평가 및 자원봉사문화와 환경보전 ▲지역이미지 개선 및 지역발전 추진 전략 등 4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는, “지난 해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유류유출사고는 한국 해양오염 역사상 가장 큰 환경재앙이었다. 다행히 사고 직후 130만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내·외 기관들의 협조로 서해안은 빠르게 평온을 되찾아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전제하며, “이번 포럼이 서해안 유류유출사고가 가져온 환경적·사회적 충격의 정도와 의미를 되짚어보고 생태계 복원과 지역 삶의 질 회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서해안이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고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포럼기간 중 (재)희망제작소가 주관하는 초청세미나가 동시에 개최되며 세미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가 서해안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가 지역주민에 미친 영향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지역사회의 복지 ▲해양오염사고와 지역사회의 위험관리 등 3개 세션으로 구성·진행되었다.

충남도, 공중화장실 발전 전국 최우수상 수상

— 행정안전부, 2008년도 전국 자치단체 종합평가 결과

충남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08년도 전국 공중화장실 발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우수기관 선정 배경으로 여성 및 장애인 등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문화가 살아있는 공중화장실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 2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발전 시책』을 추진하여 전체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지난 4년간 지역특색과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137개소에 153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산재된 불결한 재래식 간이화장실 52개소에 대해 총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첨단 간이화장실로 교체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2010년까지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전용 화장실 조성과 여성변기 비율을 남성대비 1.5배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을 위한 수유시설, 파우더룸 등 각종 편의시설을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여성과 장애인전용 차량형 이동화장실을 금년도에 6개 시·군, 2009년에 5개 시·군, 2010년까지 나머지 4개 시·군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2008년 충남발전연구원 10대 뉴스



1. 연구원 독립 신청사 건립

“와~ 드디어 우리집이 생겼어요!” 1995년 개원 이후 줄곧 셋방 살이했던 설움을 털어내고 3월 14일 충남 공주에 위치한 독립 청사로 이전하면서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연구원의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힘겨운 출퇴근을 감당한 연구원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센스까지. 공기 좋고 새 소리나는 연구원으로 놀러오세요~

2. 연구원 예산 100억 돌파

100억? 규모가 큰 국책연구원과 비교해보면 적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우리 연구원을 운영하게 해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예산 규모가 커진 만큼 총80여명의 연구원 모든 직원들은 물샐틈 없는 절약과 쓸데없는 낭비요소를 제거하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조직개편

8개팀을 1실·3부·1센터로

충남도민의 '싱크탱크'인 충남발전연구원(충발연)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 통·폐합으로 예산을 줄이고 일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충발연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능 중심의 8개 팀을 일 중심의 1실·3개 부·1센터로 통합·운영된다.

〈충청투데이 12월31일자〉

3. 연구원 조직 개편

8개팀을 1실 3부 1센터로 개편! 연구 역량 결집으로 시너지를 높이고 유연한조직 운영을 통한 협력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랍니다. 연간 2,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연구기관 최초 임금피크제와 성과관리제 등으로 시작된 지속적인 경영혁신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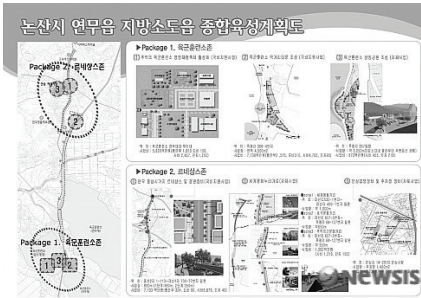


4. 충남리포트 발간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또 하나의 인기 연구물! 바로 '충남리포트' 발간을 꿈지 않을 수 없네요. 올해 처음으로 월 1회씩 발간되었던 충남리포트는 우리 충남도정의 현안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월 1회로 한정하지 않고 수시 발간체제로 전환하여 연구원의 경쟁력 강화에도 한몫 단단히 하렵니다.

5. '충청지역연구' 학술지 발간

여러 우여곡절 끝에 발간기로 결정한 우리 연구원 최초 학술지 '충청지역연구'.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속에 창간호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우리 지역 다양한 분야의 학술적 연구의 틀을 마련하고 정책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6. 소도읍육성사업 선정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충남 소도읍육성사업이 올해에도 결실을 맺었습니다. 바로 연구원에서 수행한 논산 연무읍, 보령 웅천읍, 홍성 광천읍 등 3개 소도읍이 최종 선정된 것이지요. 이곳에 2011년까지 각각 200억 원 이상이 투입돼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합니다. 막상 연구할 때는 힘들고 머리 아프지만 이런 결과를 보며 연구의 보람을 느낍니다. 팍팍!

7. 도산하기관 2년 연속 경영평가 1위

올해 경영평가 1위는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한 번도 하기 어려운 1위를 두 번이나 연속으로 차지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연구원 모두의 노력의 결실이며, 또한 더욱 열심히 연구에 매진해달라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2009년에도 1위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당근을 더 주세요!



8. 복지카드 제도 도입 및 동호회 활성화

나마도라, 휘둘러, G3, 모비딕... 이진 무슨 뜻일까요? 바로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호회 이름들이랍니다. 연구는 물론 취미활동 역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취지로 처음 도입된 복지카드로 연구원 생활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9. 안식년제 도입

"I'll be Back." 연구원의 지식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된 안식년제. 연구원을 떠나 새로운 지식과 정보로 무장하여 되돌아오면 연구원 안에서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양질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것은 1년 동안 자릴 비워도 책상 빠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10. 한밭대,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연구협약 체결

우리 연구원은 다양한 분야별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상호 연구와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갑니다. 지역의 연구원 모두가 그렇듯 모든 분야의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연구원 수, 연구 시간과 양의 절대적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공동 연구는 물론 매니징, 코칭 역할을 합니다. 보여주기식의 협약이 아닌 진정한 상호 교류를 통해 연구의 질적 성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李정부 "충청경제협의체 공동대응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고수 방침과 관련 대전, 충남·북이 충청권경제협의체를 통해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영향을 분석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세정책이 결국은 지방재정엔 큰 타격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측과 현 대덕연구단지의 문제점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주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11월 6일 충남대 사회과학대에서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충남발전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과 지역발전전략' 학술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수도권규제완화와 지역발전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송두범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충청권경제협의체를 통한 공동대응방안 모색과 더불어 충청권 시민단체와 연계해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안개정 저지를 위한 노력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 실장은 더불어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비수도권 시민단체, 전문가 등 비수도권 지역과 연대해 수도권규제완화에 대응한 실천행동을 주문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최근 과학기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충청권 발전전략’을 발표한 대전발전연구원 황혜란 연구원은 “지난 30여년간 대전지역에 자리잡은 대덕특구가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지역경제상승 효과부문에선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이 자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으로 5년간 지방재정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있는 재원 중 43조 7,0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당장 충남도에 내년도 상당부분 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예상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 주관한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이사장인 안정선 공주대 교수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국민권리를 찾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이날 제기된 문제들과 대응 방안을 토대로 정부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중도일보, 2008.11.07 1면

충남발전연구-과학기술정책연구, 연구협약 체결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CDI)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STEPI)은 11월 14일 오전 11시 30분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회의실에서 양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발연과 과기정 간 지역경제와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경쟁력 있는 정책 개발에 기여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공동연구 수행 ▲양 기관의 특화된 지식 정보의 상호 교류 및 확산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세미나와 교육 기회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교류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종합연구원과 과학기술 국책연구원 간 연구협력은 상호 이질적인 관계가 아닌 보완되고 습득해야 할 불가분의 관계임을 의미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충남의 과학기술정책연구에 많은 도움을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플러스충남정책포럼, 전국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성료

‘충청지역 갈등관리 사례연구 및 상생협력 모색하는 계기 마련’



지역의 갈등예방과 상생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원생이 한데 모였다.

지난 11월 26일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주관사 충남발전연구원, 이하 상생갈등포럼)’이 주관하고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충청남도가 후원하는 ‘제1회 전국대학(원)생 우수논문발표대회’가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이완구 충남도지사,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그리고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발표참가팀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충청지역 상생협력 갈등관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총 16편의 논문이 접수, 1차 심사를 통과한 8개 논문에 대한 발표대회 및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영예의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은 ‘대학원생 부문’에 ‘공공갈등 사례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갈등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정성근·송봉근 군(성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이, ‘대학생 부문’에 ‘천안·아산 간 갈등과 그에 따른 협력방안 조사연구’를 발표한 이



진성 군 외 4명(단국대학교 행정학과)이 차지했다.

심사위원장인 홍민기 충주대 교수는 ‘모든 논문에 학생들의 열정과 땀이 묻어 나서 보기 좋았다.’면서 ‘논문의 간결성, 단순성 부족과 선별적 용어 사용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앞으로 문제의식을 심화시키면서 상생협력방안연구에 매진한다면

갈등관리전문가로서 거듭나는데 손색이 없을 것이다.’라고 총평했다.

상생갈등포럼 관계자는 ‘채택된 우수논문은 지역의 갈등관리 교육 및 정책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첫 회였던 만큼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고품격 연구수행 할 터

충발연, 올해 사업구상 정기이사회에서 밝혀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의 2009년도 사업구상이 나왔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지난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발연 이사진, 김용웅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과 道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2008년도 사업결산, 2009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충발연은 내년도 연구원 운영 목표를 '고품격 연구수행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으로 정하고 연구역량 강화와 경영혁신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구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대응 논리 개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연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의 통섭적 협업연구 및 개방적 연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기능 중심'의 8개 팀조직을 '일 중심'의 1실 3부 1센터로 통합·개편한다.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역량 강화와 경영혁신은 연구원의 고
민이자 풀어야 할 숙제다.”라고 언급하면서 “연구책임제의 강화,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T/F팀
운영, 연구원의 체계적 평가시스템 구축 등 연구원 내·외부의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하여 명품충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발연은 그간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성과와 경영평가 1위를 인정받아 충남도로부터 올
해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의 출연금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9년도 연구비는 4억 원
이 증가하는 반면, 경상비 지출은 7400만원을 줄여 연구원 살림을 꾸려나갈 방침이다.

국방과학산업 네트워크 구축 시급

— 충남발전연구,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 세미나에서 밝혀



이명박 정부에서 방위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는 등 최근 국가·지역적 차원의 방위산업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충남발전연구원과 충남대학교 부설 국방연구소는 12월 18일 오후2시 충발연 대회의실에서 충발연 김용웅 원장과 충남대 국방연구소 길병옥 소장 등 학계 전문가, 충남도를 비롯한 논산·계룡시 담당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국방산업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충남도가 수립 중인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의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의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제언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렸다.

충남대 국방연구소 이재홍 연구위원은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발표에서 “충남은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되어 있고, 군보다 우위인 기술

수준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민-관-군이 중심이 된 국방산업클러스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체계적 연구개발과 인프라의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한 경기대학교 김강녕 교수는 “충청남도 국방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대안”이라는 주제에서 “2003년 출범한 국방벤처산업은 이제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방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조립산업 위주의 발달에 머물고 있는 국방벤처산업을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 등 첨단기술기반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국방과학클러스터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를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하고, 나홀로 충남이 아닌 충청권이 공동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박사는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추진단’ 혹은 ‘국방과학운영협의회’ 등과 같은 통합운영체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방위산업은 비밀과 보안을 중시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 및 전문가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국방과학산업은 충남의 또 다른 미래성장동력으로써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언급하면서 “국방과학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향후 충남의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전문가 네트워크로 발전해 주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충남발전연구원, 2009년도 조직개편 단행

— 연간 2,000만원 예산 절감 효과 기대

충남발전연구원이 2009년도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충발원은 지난 2007년 1차 경영혁신을 통해 연구기관 중 전국 최초로 임금피크제와 성과관리제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제2차 경영혁신을 단행, 기능 중심의 8개 팀을 일 중심의 1실 3부 1센터로 통합·운영하는 조직개편을 1월 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그간 상대적으로 연구 기능이 쇠퇴한 4개 팀을 폐지함으로써 연간 2,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며, 연구 역량 결집으로 시너지를 높이고 유연한 조직 운영을 통한 통섭 연구를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획정보팀을 기획조정연구실로 변경하여 연구기획·조정 및 평가, 연구성과물 홍보 및 확산, 출판과 정보자료실 운영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기존 연구팀을 지역정책연구부, 공간계획연구부, 그리고 환경생태연구부 등 3개부 체제로 통합하여 도정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반면, 산업디자인연구팀은 공공디자인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충남의 통합적 공공디자인 정책과 지역의 특화된 문화와 연계한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충발원 김용웅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현재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통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연구의 조직적 역량강화와 부서별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장 이인배 △지역정책연구부장 성태규 △공간계획연구부장 박철희 △환경생태연구부장 이상진 △공공디자인센터장 이충훈

충청남도 미래인재양성 국제포럼 개최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10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공주교육대학교 대강당에서 공주교육대학교, 충청남도 초·중등학교 교사,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연구진, 공주교육대학교 및 공주대학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미래인재양성(미술교육분야)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여기에서는 영국의 Dennis Atkinson교수(Goldsmith College, University of London)와 미국의 Karen Keifer-Boyd교수(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가 선진국 미술교육의 현황에 대하여, 충청남도의 미술교육인재양성을 위한 논의로 백경미(공주교육대학교), 김연희(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 후, 선도적 미술교육 인재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청남도 전문계고교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워크숍 개최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11월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유성관광호텔에서 충청남도 교육청 관계관 및 충청남도청 관계관, 중소기업청, 충남지역 전문계고교 교사 및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연구진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전문계고교 활성화 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문계고 지원사업 현황 및 중소기업청의 전문계고교 지원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도내 특성화 전문계고의 사례발표 및 컨설팅 그리고 향후 전문계고 인재양성을 위한 논의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충청남도의 전문계고교 특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활성화 방안 모색과 산학협력차원에서의 공업계고교 인재육성마련 방안 등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관 관계자들의 대화의 장 마련과 함께 인재육성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토론회” 개최

— 전국 시도지역혁신협의회 공동 주최



지난 9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지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및 관계자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11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원희룡 국회의원과 김재균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개최하였다.

금번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가져야 할 균형·지역주도·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이 상당부분 삭제되고, 수정되어 기본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지역의 원성을 들었다.

이러한 개정안의 문제를 전국적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 회의(9.30) 및 전국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 회의(10.8)가 개최되었으며, 각 지역의 협의회 위원 및 관계자들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본 토론회는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와 이창용 대구경북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의 균특법 개정대체법안 제안과 함께 8명의 토론자들이 균특법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충청 광역경제권 심포지엄” 개최

— 대전·충북·충남지역혁신협의회 공동 주최



대전·충북·충남지역혁신협의회는 지난 11월 19일, 새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충청권이 당면하고 있는 광역권의 다양한 과제를 심도있게 진단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초광역개발권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된 내륙문제와 충청권 광역경제권 출범과 여건 모색, 실용정부 지역정책과 연계한 공동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주제발표에 이어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권태호(세명대교수), 김진석(전북발전연구원 박사), 양우석(홍익대교수), 이영훈(한서대교수), 임형섭(광주발전연구원실장), 채성주(충북개발연구원 박사) 등 지역안팎의 전문가들이 충청 광역경제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향후 광역경제권 추진에 있어서의 방안 모색에 중요한 기회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2008년도 제4차 지역경제연구회” 개최

— 충남지역혁신협의회 ·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 충남발전연구원 공동 주최



2008년도 제4차 “지역경제연구회”가 12월 3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2005년부터 대전·충남지역의 경제전문가를 중심으로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현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지역경제연구회는 충남지역혁신협의회의 연구회 조직으로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본 연구회는 올해 들어 4번째로 개최되었고, 현재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관련한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1주제는 한밭대학교 조복현 교수의 “세계 금융위기와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올 하반기 들어 나라 안팎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세계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한국경제의 실태와 향후 대처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제2주제는 목원대학교 정재호 교수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시장 평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평가하여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과제를 살펴보고 실용정부의 부동산정책방향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우려와 함께 국내시장악화 등과 관련하여 지역경제연구회 회원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그리고 대전충남지역의 지역경제를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문화관광분과포럼: 충청권의 문화관광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충청남도 · 충남관광협회 · 충남지역혁신협의회 공동주최



2008. 12. 4(목), 문화관광분과포럼이 “충청권의 문화관광발전을 위한 세미나”라는 주제 아래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본 포럼은 충청남도가 2010년 충청방문의 해와 2010년 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문화관광분야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준비되었다.

2010 충청 방문의 해 사업계획 수립에 참여한 양광호 공주영상대학 교수의 “2010 충청 방문의 해 사업전략 및 추진과제”라는 주제발표와 공주대학교 윤용혁 교수의 “2010 대백제전의 세계화의 과제”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이 두 가지 주제발표에 대하여 건양대학교 전명숙 교수, 우송정보대학 장인식 교수, 배재대학교 박근수 교수, 충청남도 문화산업과 고준근 사무관이 중심이 되어 2010 충청 방문의 해 및 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현재부터 준비해야 할 점들과 지역민으로서 국내외적으로 충남을 알리기 위한 방안을 교류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제2단계 충청남도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워크숍 개최



충청남도과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는 11월 7일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제2단계 충청남도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을 초청,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과 과제 수행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원활한 총량제 추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상진 충남수질총량관리센터장의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추진현황', 환경부 유역환경제도와 조석훈 사무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진행정도와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의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2단계 총량관리제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부의 총량관리제 추진방향과 단계별 계획 및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중소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중소도시재생 정책 수립을 위해 2008년 7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중소도시재생 정책방향과 추진계획」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의 쇠퇴실태와 원인 및 국토정책에 있어서 중소도시재생의 위상을 살펴봄으로써 중소도시재생을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사업을 도출하였다.

중소도시의 현황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활력 있는 창조적 중소도시재생”으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재생”, “경쟁력 있는 경제기반 재생”, “함께하는 재생역량 강화”의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현실화할 수 있는 ‘10대 도시재생 전략사업’을 도출하였다.

‘10대 도시재생 전략사업’은 성격에 따라 정책적 재생사업(저탄소 녹색지향적 도시재생사업, 지역거점도시 기능회복 재생사업, 지역 신성장거점 연계 재생사업), 부문별 재생사업(쇠퇴주거지역 재생사업, 구도심 재생사업, 산업구조 고도화 재생사업, 기존상권 경쟁력 재생사업, 역사문화·디자인을 활용한 창조적 도시재생사업), 절차적 재생사업(사회자본 형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패키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전략사업별로 선진사례, 구체적 사업대상과 내용,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추진방안으로 테스트베드 시범적용을 제안하였으며, 중소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안)을 제시하여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 등 관련 주체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중소도시와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하고 법제도 정비방안으로 현 법제도를 활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법제도 제정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소도시 재생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을 검토하여 단계별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원 고 모 집



열린충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충남은 충남 발전에 관한 연구논문, 정책제언 등
참신한 내용과 정보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투고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 참조 (작성요령, 투고신청서 등)

| 보내실곳 | 충남 공주시 금흥동 101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

전화 (041) 840-1123 팩스 (041) 840-1129 E-mail : cdipr@cdi.re.kr

「충청지역연구」 논문 모집 안내

「충청지역연구」는

1. 충남발전연구원(CDI)이 발간하는 충청지역의 상생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각 분야별 학문적 발전과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문학술지입니다.
2. 본 학술지는 1년에 2회 발간이 원칙이며, 매년 6월말, 12월말에 발간됩니다.
3. 원고 투고 분야는 농촌개발, 도시 및 지역계획, 지방행정, 문화 및 관광, 산업경제, 환경생태, 인적자원개발, 지역혁신 으로 한정하되, 충청지역과의 직·간접적 연관이있는 논문이어야 합니다.

논문 투고 및 게재

1. 투고를 희망하시는 분은 “논문 원고”와 “논문투고신청서”를 아래의 E-Mail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역연구”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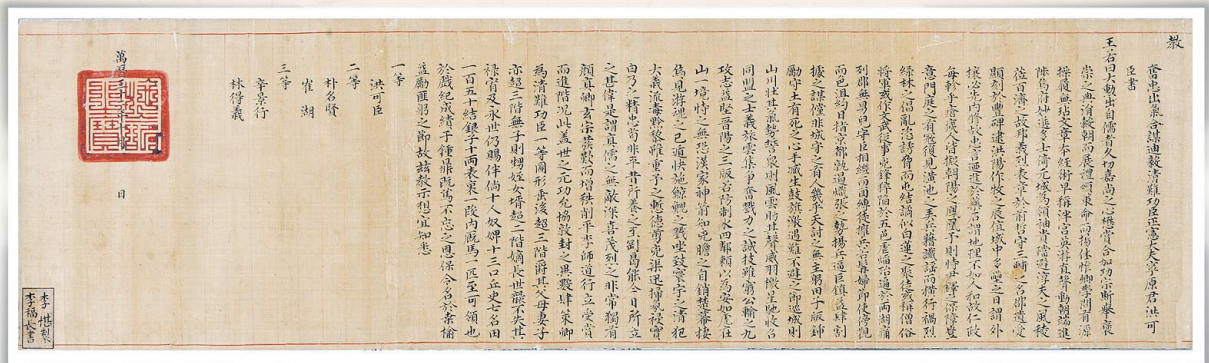
[314-140] 충남 공주시 금홍동 101번지

T : 041-840-1123 / F : 041-840-1129

E-mail : cdipr@cdi.re.kr

2. 원고 마감 : 매년 5월말, 11월말일 도착분에 한함
3. 심사 후 채택된 원고에 한해 10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함
4.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중이거나, 또는 기 게재된 논문이 아니어야 합니다.
5. 일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고는 본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가 확정됩니다. 또한 확정된 논문의 판권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있습니다.
6. 「충청지역연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를 참조하십시오.
7.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될 학술지인 「충청지역연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충남의 문화유산 ⑮



홍가신 공신교서 (洪可臣 功臣敎書)

이몽학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홍가신(洪可臣, 1541~1615)을 청난공신 1등에 봉한 교서이다. 홍가신의 본관은 남양(南陽)이고, 자는 흥도(興道), 호는 만전당(晩全堂)·긴옹(艮翁), 시호는 문장(文莊)이다.

홍주목사로 재임 중이던 1596년(선조 29) 홍산 무량사에서 왕족의 서자 출신인 이몽학이 난을 일으켰다. 반란군은 4일 만에 5고을을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홍주성까지 진격해왔다. 이에 홍가신은 관군을 이끌고 박명현·임득의 등 홍주 출신 무장들과 힘을 합쳐 반란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이들을 진압하는데 앞장섰다. 그 공으로 1604년 청난공신 1등에 책록되었고, 이어 영원군(寧原君)에 봉해졌다.

아산시 염치읍 대동리 황골에는 홍가신의 종택과 묘소, 사당 등 유적이 남아 있으며, 홍가신의 신주를 모시던 요여와 관련 고문서가 충남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자료제공 : 충남역사박물관)

THE CHUNGNAM REVIEW



충남의 밝은 미래 충남발전연구원이 열어갑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고,
앞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풍요롭고 건강한 정신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충남도민의 모습입니다.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충남발전연구원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